

정책연구 2009-13

제조업 소기업 편중 현상 평가와 시사점

김 필 헌

제조업 소기업 편중 현상 평가와 시사점

1판1쇄 인쇄 / 2009년 12월 14일

1판1쇄 발행 / 2009년 12월 18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김영용

편집인 김영용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150-7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전화(대표) 3771-0001 (직통) 3771-0057 팩스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9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02-3771-0057

ISBN 978-89-8031-568-0

값 6,000원

목 차

요 약.....	7
I.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5
II. 기업규모와 경제성장.....	17
1. 기업규모별 비중 동향.....	17
2. 기업규모와 생산성.....	24
3. 기업규모와 고용의 질.....	30
4. 기업규모와 거시경제 성장.....	35
III. 기업규모의 거시경제적 결정요인.....	42
1. 보편적 요인.....	42
2. 국내 특수요인.....	51
IV.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65
1. 연구결과 요약.....	65
2. 정책대안.....	68
참고문헌.....	79

표 목차

- <표 1> 중소기업의 경제적 비중 추이 17
- <표 2> 중소기업 규모별 사업체 비중 변화 추이 19
- <표 3> 중소기업 규모별 고용 비중 변화 추이 19
- <표 4> 제조업 부문 기업규모별 사업체 비중(2002) 21
- <표 5> 제조업 부문 기업규모별 고용 비중(2002) 22
- <표 6> 중소기업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영업이익률 25
- <표 7> 기업규모별 연구개발 동향 27
- <표 8> 기업규모별 자본집약도 28
- <표 9> 기업규모별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28
- <표 10> 기업규모별 비정규직 비중 30
- <표 11> 기업규모별 평균 근속연수 33
- <표 12> 기업규모별 이직률 비교 34
- <표 13> 분석에 사용된 변수 39
- <표 14> 표본국가 39
- <표 15> 소기업 비중과 경제성장률의 관계 41
- <표 16> 분석에 사용된 변수 48
- <표 17> 소기업 비중의 거시경제적 결정요인 분석 49
- <표 18> 기업규모별 부채비율 52
- <표 19> 중소기업 지원예산 증가 추이 53
- <표 20> 전국 신설 및 부도법인 동향 54
- <표 21> 주요 경쟁국 단위노동비용 증감률 비교 62
- <표 22> 제조업의 선도 및 한계집단 구성비중 변화 69
- <표 23> 기업퇴출의 기간 및 비용의 국제비교 69
- <표 24>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 정책의 변천과정 71
- <표 25> 중소기업 설비투자 총액 및 조달 원천(1998~2007년 평균) 75

그림 목차

<그림 1> 중소기업 수와 국민소득의 국제적 상관관계	20
<그림 2> 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비교	24
<그림 3>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 부문 기업규모별 투자 추이(1998~2007년) ..	26
<그림 4> 기업규모별 급여 비교	32
<그림 5> OECD 주요국의 규제비용과 소기업 비중	44
<그림 6> 제조업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과 소기업 비중의 관계	55
<그림 7> 민간소비와 기업규모별 평균가동률	57
<그림 8> 평균가동률 vs. 매출액 영업이익률	58
<그림 9> 제조업 부문별 무역수지	60
<그림 10> 2000년대 중국 소비재 수입과 국내 중소기업 사업체 수 추이 ..	61
<그림 11>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익성 비교	63

요 약

□ 우리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1990년대 이후 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제조업 부문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사업체 및 고용 비중, 생산액 비중은 1993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 300명 이하 중소기업 집단을 종사자 규모별로 세분해 보았을 때 1996년 이후 5~19명 규모인 중소기업의 고용 및 사업체 비중이 크게 확대됨.

○ 1996~2006년 기간 5~9명 규모의 소규모 사업체 비중이 가장 크게 확대되었으며(25.4%), 10~19명 규모의 사업체 비중도 그 다음으로 크게 확대됨(10.3%).

○ 이들 두 기업집단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세는 더욱 커 같은 기간 5~9명 기업의 고용 비중이 47.1%, 10~19명 기업의 고용 비중은 29.9% 확대됨.

- 국내 제조업의 소기업 편중 현상은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심한 수준임.

○ 한국의 10명 미만 기업의 사업체 비중과 고용 비중은 2002년 기준으로 각각 81.9%와 24.4%를 기록하여 주요 선진국 평균인 70.4%와 12.5%를 크게 상회

○ 사업체 비중 면에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인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스웨덴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체들의 고용 비중은 각각 11.6%, 9%, 12%, 19.1%, 11.1%의 낮은 수준을 기록

□ 소기업 편중 현상의 경제적 영향

-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투자여력의 부족으로 성장성 제고를 위한 투자나 연구개발 활동이 부진함.

- 소기업의 경제적 비중 확대는 투자와 기술혁신 노력의 부진을 초래하고 노동생산성의 제고와 혁신을 어렵게 하여 국내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중소기업 비중의 확대는 고용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소기업 비중 확대는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로 이어져 고용의 질적 저하를 초래함.
- 또한 기업 간 급여 차이를 확대시켜 고용의 상대적인 질적 저하를 초래함.
- 낮은 급여와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대변되는 고용의 질적 저하는 소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 만족도 저하로 이어짐.
- 고용의 질적 저하는 구매력 부진을 통해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내수 중심의 소기업 투자를 부진하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중소기업 비중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비중의 확대는 영세화 채널을 통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통계분석 결과, 1~9인 규모 기업 비중은 경제성장과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소기업 비중의 결정요인

- 1) 포편적 요인

- 금융발전은 불완전한 자본시장 구조하에서 자본의 효율적 배분과 기업

이 직면한 자금조달 여건의 개선을 통해 기업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기업규모의 확대를 가져옴.

- 기업 관련 규제는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저해하여 기업규모의 축소를 초래함.
- 효율적인 법제도는 기업의 투자동기를 제고시켜 기업규모의 확대를 촉진함.
- 시장규모의 확대는 기업의 전문화와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함으로써 기업규모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추가적으로 Lucas(1978)는 경제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을 이론적 모형을 이용하여 제시함.
- 실증분석 결과는 대외무역 개방이 소기업 비중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요인임을 보여줌.

- 국내 특수요인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온정주의적 중소기업 정책기조로 인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정부의 지원 확대 아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방출된 유희자원이 저성장 산업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소기업이 난립하는 상황이 발생함.
- 또한 민간소비의 장기 침체는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통해 투자부진으로 이어져 영세화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세계화로 인해 국제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비용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회복의 일환으로 기업 간 수직적 분업체계가 더욱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영세화도 가속화됨.

□ 국내 제조업의 소기업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

- 제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폭넓은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강도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최근 금융위기 관련 일부 산업에 국한되어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최근 국제금융위기로 위기를 맞은 건설업과 조선업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 외 제조업종 부문에서는 소득보전과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영세 소기업과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러한 현재 추세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당시의 중소기업 보호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음.
- 경제적 효과를 감안하지 않은 중소기업 보호는 장기간 우리 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현재 부분적으로 추진 중인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강도와 폭을 더욱 확대하여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
- 이와 동시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구조조정을 통해 유출된 생산자원이 이들 기업으로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 기술혁신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전략적 지원 및 대기업과의 상생관계 구축이 필요함.

- 산업별 내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이 필요함.
- 국제 분업화가 세계적 추세가 되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더욱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분업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금융권은 우량 중소기업에 특화된 자본조달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금융권은 중소기업에 특화된 자본조달 창구를 마련하여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특화된 금융전문 인력의 양성을 통해 중소기업 투자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중소기업 자본조달에 따르는 위험의 효율적인 분산을 위해 금융기법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차원에서 선진화된 중소기업 위주의 자본조달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대내외 시장규모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국제화를 통한 해외시장의 확대는 경쟁 및 선진기술의 도입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촉진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복잡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관련 제도를 전략적으로 단순화하여 정책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선택적 지원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수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또한 인수·합병 및 직접투자 등을 통한 해외기업의 국내 진출을 촉진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내수시장의 확대를 위해 민간소비의 활성화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관련 규제제도의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관련 규제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함.
- 현재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유연화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제조업 소기업 편중 현상 평가와 시사점

- I.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II. 기업규모와 경제성장
- III. 기업규모의 거시경제적 결정요인
- IV.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I.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최근 국내 제조업에서 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조업 영세화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제기됨.

- 개방을 통한 세계화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은 시급한 정책과제임.

- 1990년대 이후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정보화가 이루어지면서 과업 자체가 교역대상이 되는 현상이 일어남.
- 국제 분업화 체제의 확산으로 국가의 생산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유연한 적응력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의 육성은 우리가 당면한 시급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제조업에서 영세 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제조업 영세화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OECD(2005)에 따르면, 2002년을 기준으로 전체 제조기업 중 10인 미만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8.6%로 OECD 평균인 73.9%를 크게 상회함.
- 또한 이들 기업의 고용 비중도 OECD 국가의 평균치인 13.9%보다 훨씬 높은 42.9%를 차지하고 있음.

□ 본 연구는 먼저 제조업의 소기업 편중 현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함.

- 중소기업 편중 현상은 경제발전 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음.

- 그럴 경우, 최근 제기되고 있는 영세화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우려는 근거가 희박한 것일 수 있음.

- 따라서 이와 관련한 대응방안의 모색 이전에 과연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지나친 소기업 편중 현상이 거시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기업 편중 현상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국내 제조업의 소기업 비중이 왜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지에 대한 원인분석을 시도하고자 함.

- 이를 위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기업규모의 보편적 결정요인들을 파악하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한 국내 특수 결정요인들을 찾아내고자 함.

-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II. 기업규모와 경제성장

1. 기업규모별 비중 동향

□ 우리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제조업 부문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사업체 및 고용 비중, 생산액 비중은 1993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표 1> 참조).¹⁾

<표 1> 중소기업의 경제적 비중 추이

(단위: %)

제조업	사업체 비중	고용 비중	제조업 생산 비중
1993	99.57	65.57	47.81
1994	99.63	71.15	47.93
1995	99.66	71.24	46.54
1996	99.64	69.51	46.75
1997	99.67	71.57	46.32
1998	99.69	72.14	46.43
1999	99.71	74.33	47.50
2000	99.74	76.19	47.37
2001	99.75	79.24	49.09
2002	99.76	79.4	50.77
2003	99.76	79.28	50.63
2004	99.76	78.39	48.60
2005	99.8	79.99	49.52
2006	99.81	80.01	49.37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1) 중소기업의 정의는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 제정 이후 시대나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수차례 변화를 겪어 오다가 2000년 들어 종사자 규모가 300인 이하이거나 자본금 규모 80억 원 이하인 기업이면서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소유되고 운영되는 기업에 한해서만 중소기업의 범주에 포함됨.

- 사업체 비중의 경우 이미 1990년대 초반에 압도적인 수준인 99.57% (1993년)를 차지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
- 중소기업의 제조업 내 고용 비중은 경기상황에 따라 소폭의 등락을 보 이긴 했으나 1993~2006년 기간 동안 22%나 확대됨.
- 사업체수와 고용의 증대에 따라 제조업 생산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확대되어 1993년 47.8%에서 2006년 49.4%로 1.6%p 증가함.
- 1990년대 이후 중소기업의 생산비중 증가세는 고용 비중 증가세에 크 게 못 미치고 있음. 이는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침체되어 있다는 간 접적인 증거

□ 중소기업 비중 확대는 주로 종사자 5~19인 규모의 영세 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짐(<표 2>와 <표 3> 참조).

- 300명 이하 중소기업 집단을 종사자 규모별로 세분해 보았을 때 1996년 이후 5~19명 규모인 중소기업의 고용 및 사업체 비중이 크게 확대됨.

- 1996~2006년 5~9명 규모의 소규모 사업체 비중이 가장 크게 확대되었 으며(25.4%), 10~19명 규모의 사업체 비중도 그 다음으로 크게 확대됨 (10.3%).
- 이들 두 기업집단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세는 더욱 커 같은 기간 5~9명 기업의 고용 비중이 47.1%, 10~19명 기업의 고용 비중은 29.9% 확대됨.

- 반면, 50인 이상 기업이 사업체와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50~99명 기업의 고용 비중은 10.2% 늘었으나 사업체 비중은 -7.9%의 감소세를 보임.
- 100~299명 기업의 경우 고용 및 사업체 비중의 감소가 가장 두드러져 각각 -0.9%, -14.51%의 감소세를 보임.

<표 2> 중소기업 규모별 사업체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기업분류	소기업					중기업			
	종사자규모	1~4명	5~9명	10~19명	20~49명	계	50~99명	100~299명	계
1996		67.56	14.53	8.70	6.05	96.84	1.79	1.02	2.81
1997		68.54	15.18	7.91	5.49	97.12	1.62	0.94	2.56
1998		70.33	13.55	7.83	5.42	97.13	1.63	0.93	2.56
1999		68.07	14.73	8.56	5.71	97.07	1.73	0.92	2.65
2000		67.14	15.07	8.99	5.88	97.08	1.72	0.94	2.66
2001		66.30	15.65	9.29	5.81	97.05	1.73	0.96	2.69
2002		65.72	16.20	9.36	5.92	97.2	1.67	0.89	2.56
2003		60.82	20.81	9.41	6.07	97.11	1.71	0.94	2.65
2004		62.65	19.27	9.29	5.93	97.14	1.69	0.92	2.61
2005		64.15	17.60	9.45	5.97	97.17	1.74	0.89	2.63
2006		63.44	18.22	9.60	6.03	97.29	1.65	0.87	2.52
기간 증가율		-6.09	25.42	10.30	-0.31	0.46	-7.90	-14.51	-10.3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표 3> 중소기업 규모별 고용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기업분류	소기업					중기업			
	종사자규모	1~4명	5~9명	10~19명	20~49명	계	50~99명	100~299명	계
1996		12.59	7.91	9.74	15.22	45.46	10.18	13.88	24.06
1997		13.60	8.95	9.69	15.23	47.47	10.20	13.90	24.1
1998		14.06	8.18	9.87	15.44	47.55	10.45	14.15	24.6
1999		13.57	8.98	10.75	16.17	49.47	11.08	13.78	24.86
2000		13.65	9.27	11.32	16.69	50.93	11.10	14.17	25.27
2001		13.81	10.07	11.99	16.90	52.77	11.48	14.99	26.47
2002		13.95	10.45	12.28	17.49	54.17	11.23	14.00	25.23
2003		11.84	12.48	12.02	17.52	53.86	11.20	14.23	25.43
2004		12.27	11.74	11.88	17.17	53.06	11.10	14.23	25.33
2005		12.92	11.20	12.41	17.67	54.2	11.73	14.05	25.78
2006		12.80	11.63	12.66	17.94	55.03	11.22	13.76	24.98
기간 증가율		1.72	47.06	29.94	17.90	21.1	10.24	-0.87	3.8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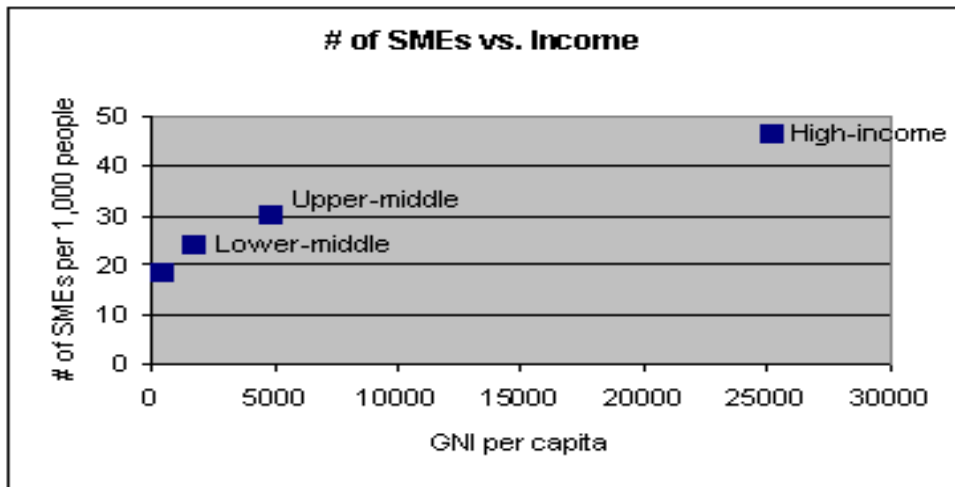
-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에서 사업체 및 고용 측면 기업 간 적하(trickle-down) 현상이 소기업, 특히 5~9인 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국내 제조업의 소기업 편중 현상은 다른 나라에 비해 대단히 심한 편(<표 4>와 <표 5> 참조)

- 세계적으로 경제 활력 증진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중소기업 집단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도 더욱 확대되어 왔음.

- 중소기업의 수와 소득수준 간에 보이는 높은 상관관계는 우량 중소기업의 육성이 높은 국민소득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함(<그림 1> 참조).

<그림 1> 중소기업 수와 국민소득의 국제적 상관관계



주: 최상위그룹은 한국,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한 25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상위그룹은 아르헨티나, 헝가리 등을 포함한 15개국, 중저위그룹은 브라질, 중국 등을 포함한 28개국, 저소득그룹은 베트남 등 7개국이 포함되어 있음. 자세한 사항은 원문 참조

자료: Marta Kozak,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 Collection of Published Data",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Washington, D.C., 2005.

<표 4> 제조업 부문 기업규모별 사업체 비중¹⁾(2002)²⁾

(단위: %)

국명	10인 미만	10~49	50인 이하	50~249 ³⁾	250+ ⁴⁾
호주	72.6	21.8	94.4	4.1	1.5
오스트리아	71.0	21.8	92.8	5.5	1.6
벨기에	79.4	15.5	94.9	4.1	1.0
체코공화국	89.2	7.6	96.8	2.6	0.7
덴마크	71.4	21.1	92.5	6.0	1.5
핀란드	84.0	11.4	95.4	3.6	1.0
프랑스	81.6	14.0	95.6	3.4	0.9
독일	62.1	27.3	89.4	8.4	2.2
그리스	..	79.4	79.4	17.1	3.5
헝가리	87.2	9.4	96.6	2.7	0.8
아일랜드	39.0	42.0	81	15.2	3.8
이탈리아	83.4	14.4	97.8	1.9	0.3
일본	50.9	39.2	90.1	8.5	1.4
한국	81.9	15.3	97.2	2.6	0.2
네덜란드	74.7	18.9	93.6	5.2	1.2
뉴질랜드	81.3	15.3	96.6	2.7	0.6
노르웨이	60.6	29.4	90	7.6	1.7
폴란드	89.7	6.5	96.2	3.0	0.8
포르투갈	78.9	16.7	95.6	3.9	0.5
슬로바키아	44.2	32.7	76.9	17.2	6.0
스페인	78.4	18.4	96.8	2.8	0.5
스웨덴	85.4	10.8	96.2	3.0	0.8
영국	71.7	21.0	92.7	5.9	1.5
전체 평균	70.4	22.2	92.5	6.0	1.5

주: 1) 일본, 호주, 한국은 사업체 기준

2) 혹은 가장 최근 연도

3) 한국은 50~300인 규모 기업의 비중

4) 한국은 300인 이상 규모 기업의 비중

자료: OECD(2005b), Statistics on Enterprises by Size Class (SEC) database, OECD, Paris.

한국 자료는 중소기업중앙회DB, 2005.

<표 5> 제조업 부문 기업규모별 고용 비중¹⁾(2002)²⁾

(단위: %)

국명	10인 미만	10~49	50인 이하	50~249 ³⁾	250+ ⁴⁾
호주	14.1	20.5	34.6	17.8	47.7
오스트리아	10.3	18.9	29.2	26.9	43.8
벨기에	11.6	18.9	30.5	23.8	45.8
체코공화국	14.2	15.6	29.8	25.5	44.7
덴마크	7.4	18.9	26.3	26.3	47.4
핀란드	9.0	14.8	23.8	22.5	53.7
프랑스	12.0	19.0	31	22.3	46.7
독일	6.7	14.5	21.2	23.7	55.1
그리스	..	26.6	26.6	34.0	39.5
헝가리	16.1	16.5	32.6	23.2	44.2
아일랜드	4.4	19.2	23.6	32.3	44.2
이탈리아	25.5	31.0	56.5	20.8	22.8
일본	10.8	28.4	39.2	29.9	30.9
한국	24.4	29.8	54.2	25.2	20.6
네덜란드	9.9	23.3	33.2	30.6	36.2
뉴질랜드	19.1	24.2	43.3	21.4	35.3
노르웨이	8.7	22.9	31.6	28.3	40.1
폴란드	19.4	12.8	32.2	27.9	39.9
포르투갈	18.9	28.1	47	29.3	23.7
슬로바키아	3.5	10.0	13.5	26.4	60.0
스페인	19.2	31.9	51.1	22.6	26.2
스웨덴	11.1	15.2	26.3	20.7	53.0
영국	10.1	18.8	28.9	25.8	45.3
전체 평균	12.5	20.9	33.3	25.5	41.2

주: 1) 폴란드는 봉급제 근로자(salaried employees)

2) 혹은 가장 최근 연도

3) 한국은 50~300인 규모 기업의 비중

4) 한국은 300인 이상 규모 기업의 비중

자료: OECD(2005b), Statistics on Enterprises by Size Class (SEC) database, OECD, Paris.

한국 자료는 중소기업중앙회DB, 2005.

- 세계적으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은 기업의 95% 이상, 고용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창출의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함.)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내 제조업 부문에서의 중소기업 비중 확대는 세계적 추세와 일치함.

- 그러나 국내 제조업의 소기업 편중 현상은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심한 수준임.

- 한국의 10명 미만 기업의 사업체 비중과 고용 비중은 2002년 기준으로 각각 81.9%와 24.4%를 기록하여 주요 선진국 평균인 70.4%와 12.5%를 크게 상회
- 사업체 비중 면에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인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스웨덴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체들의 고용 비중은 각각 11.6%, 9%, 12%, 19.1%, 11.1%의 낮은 수준을 기록

□ 국내 제조업의 과도한 소기업 편중 현상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가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과도한 소기업 편중 현상은 투자 부진으로 인한 생산성 및 고용의 질적 저하를 통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소기업 집단은 기업 특성상 생산성 개선 내지 혁신 등에 필요한 투자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또한 투자 부진은 고용환경 개선을 어렵게 하여 고용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며, 이는 다시 내수의 부진을 초래함.

2) OECD(2005a)

2. 기업규모와 생산성

□ 기업 투자의 바탕이 되는 수익성은 기업규모와 반비례의 관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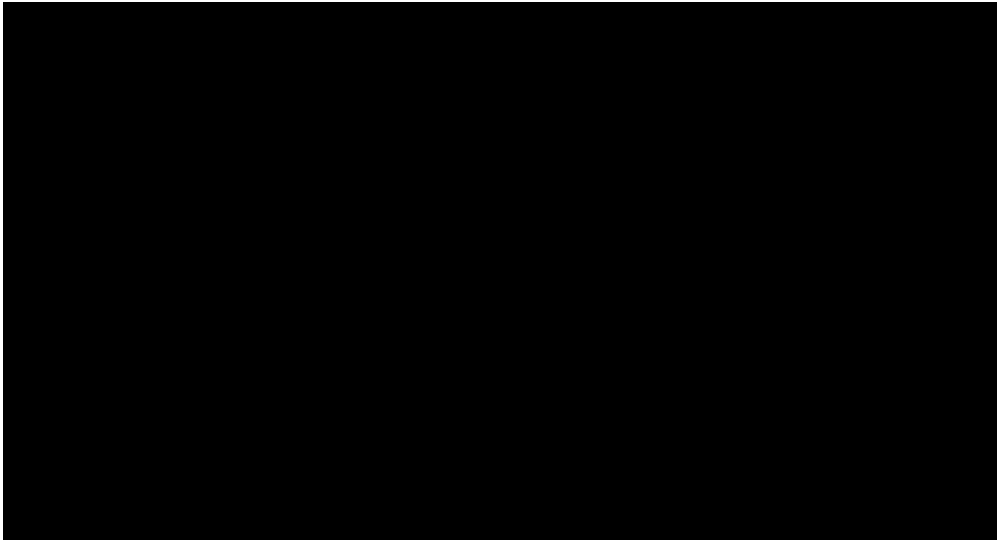
-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볼 때,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대기업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함(<그림 2> 참조).

- 1993년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크게는 5.3%p에서 1.4%p 사이의 차이를 보임.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익성 차이는 1993~1999년 기간 평균 3.2%p에서 2000~2007년 기간 평균 2.7%p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최근 들어 다시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
- 반면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대기업에 비해 낮은 변동폭을 보여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

* 매출액 영업이익률 표준편차: 대기업 1.23, 중소기업 0.47(1993~2007년)

<그림 2> 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비교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수익성 차이는 중소기업 집단 내에서도 기업규모에 비례하는 모습을 보임
(<표 6> 참조).

- 5~9인 규모의 영세 소기업과 200~299인 이상 기업 간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993~2007년 기간 평균 1.1%p의 차이를 보임.
- 2003년 이후 기업 간 수익성 차이가 반전되어 5~9인 기업집단이 두 번째로 높은 수익을 기록하긴 했으나,
- 1993~2007년 기간 중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대체로 종사자 기준 기업규모와 정비례하는 모습을 보임.

<표 6> 중소기업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영업이익률

(단위: %)

구 분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199인	200~299인
1993~1997	4.8	5.7	5.9	5.4	5.7	6.0
1998~2002	4.9	5.4	5.5	5.2	5.5	6.3
2003~2007	4.8	4.4	4.2	4.1	4.4	5.2
기간 평균	4.8	5.2	5.2	4.9	5.2	5.9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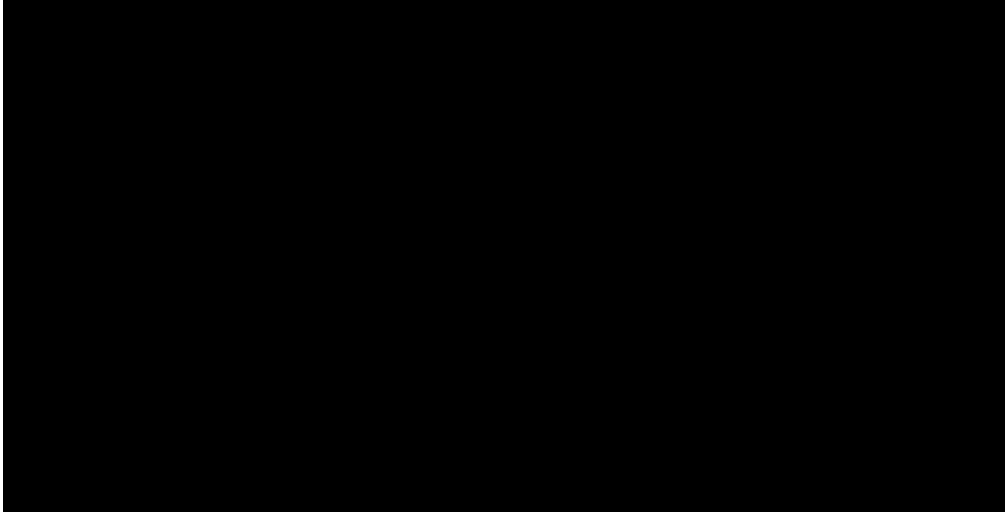
□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투자와 기술혁신 노력이 저조함.

-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에서 2007년까지 기간 중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투자가 부진했음을 알 수 있음(<그림 3> 참조).

- 가장 광범위한 투자 지표인 유형자산 증가율을 이용하여 기업규모별 투자 추세를 파악함.
- 5~9인 기업의 기간 평균 유형자산 증가율은 2.1%를 기록함.
- 이는 같은 기간 200~299인 기업의 유형자산 증가율 11.2%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임.
- 참고로 투자의 증가세는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확대되지만 그 확대폭은 기업규모와 역U자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 부문 기업규모별 투자 추이(1998~2007년)

(단위: %)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기술혁신에 필수적인 연구개발 노력 측면에서도 기업규모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표 7> 참조).

- 경제발전에서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크기와 기술혁신 능력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가지고 있음.
- 기업규모가 클수록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비 절감의 혜택을 더욱 크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에 필요한 초기 고정비용의 지불과 연구개발을 통해 생산된 기술혁신을 상업화하는 데도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기업이 더욱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음.
- 매출액 대비 경상연구 개발비를 이용하여 살펴볼 경우, 일반적으로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연구개발에 더욱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0년대 이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은 대기업의 40%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중소기업 집단 내에서도 영세 소기업인 5~9인 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이 다른 중소기업 집단에 비해 대단히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7> 기업규모별 연구개발 동향

(단위: %)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199인	200~299인
2000	0.74	0.27	0.02	0.04	0.20	0.17	0.26	0.49
2001	0.95	0.32	0.05	0.17	0.14	0.26	0.30	0.31
2002	1.03	0.40	0.14	0.22	0.23	0.31	0.42	0.44
2003	1.13	0.42	0.22	0.18	0.26	0.39	0.43	0.47
2004	1.29	0.44	0.11	0.28	0.26	0.34	0.40	0.46
2005	1.26	0.54	0.21	0.43	0.38	0.46	0.55	0.45
2006	1.27	0.54	0.43	0.62	0.51	0.46	0.56	0.58
2007	1.23	0.56	0.25	0.73	0.54	0.70	0.66	0.82
기간 평균	1.11	0.44	0.18	0.33	0.31	0.39	0.45	0.50

주: 매출액 대비 경상연구 개발비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경영지표

□ 소기업의 경제적 비중 확대는 투자와 기술혁신 노력의 부진을 통해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저하로 이어짐.

- 투자의 부진과 함께 중소기업 집단의 자본집약도는 대기업의 30% 수준에
머물고 있음(<표 8> 참조).

-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떨어지는 영세기업의 비중 확대로 생산성 증대를 위한 투자가 부진해지면서 중소기업의 자본집약도는 대기업의 30%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대부분 기업의 자본집약도는 외환위기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최근인 2003년 이후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음.
- 특히 200~299인 기업의 경우 2003~2007년 기간 중 자본집약도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3~1997년 기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함.
- 반면 국내 제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5~9인 규모의 영세 소기업의 자본집약도는 여전히 외환위기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하락 추세를 보이며 대기업 대비 15% 수준을 기록함.

<표 8> 기업규모별 자본집약도

(단위: %)

구 분	중소기업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199인	200~299인
1993~1997	34	21	23	28	32	36	37
1998~2002	30	16	18	20	23	23	33
2003~2007	33	15	20	23	28	36	46

주: 각 연도 대기업 1인당 부가가치(명목)=100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은행

<표 9> 기업규모별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단위: %)

1인당 부가가치	중소기업 전체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199인	200~299인
2002	40	24	30	33	36	39	54
2003	40	25	29	30	35	41	49
2004	37	22	27	29	32	37	49
2005	40	24	29	31	34	45	50
2006	41	25	30	32	36	48	55
2007	40	24	28	32	40	45	53
평균	39.60	20.83	25.83	29.17	37.17	51.67	76.17

주: 각 연도 대기업 1인당 부가가치(명목)=100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은행

-~이에 따라 규모별 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표 9> 참조).

- 2000년대 들어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40%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음.
- 생산성 하락은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도 2001년 42.9%에서 2006년 현재 31.9%로 11%p 감소함.

- 중소기업 집단 내에서도 기업규모에 따른 노동생산성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제조업 내에서의 비중이 가장 큰 5~9인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 기준 20.8%에 불과한 수준인 반면 200~299인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76% 이상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
- 영세 소기업 비중의 확대는 노동생산성의 제고와 혁신을 어렵게 하여 국내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이와 관련하여 조덕희(2006)는 영세 소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던 미국과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면서 영세화가 제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짐을 간접적으로 제시함.
 - 기업규모가 기술개발 경로를 통하여 생산성의 증대로 이어짐을 실증적으로 밝힌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신태영(1999)은 제조업 부문 3,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신상품, 상품개선, 그리고 생산공정 혁신 등의 혁신지수와 종사자 수로 측정된 기업규모 간에 역U자형 관계가 있음을 보임.
 - 송치웅(2007)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기술혁신조사’(2005)와 부품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Probit 모형 분석을 통해 기업규모가 클수록 기술혁신이 빠름을 보임.
 - 해외연구로는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산업별 평균 기업규모와 생산성 증가율 사이에 양(+)의 관계가 있음을 밝힌 Pagano and Schivardi(2003)와 미국 제조업 부문 세부업종(4-digit)을 대상으로 대기업의 고용 비중과 해당 업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양(+)의 관계를 가짐을 보인 Acs, Morck and Yeung(1999) 등이 있음.

3. 기업규모와 고용의 질

□ 소기업 비중의 확대는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를 통해 고용의 질적 저하를 초래함(<표 10> 참조).

- 제조업 부문 고용의 질적 저하는 1997년 이후 비정규직이 전체 종사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50% 가까이 확대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표 10> 기업규모별 비정규직 비중

(단위: %)

구 분	제조업 전체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199인	200~299인
1997	9.32	19.88	22.12	13.03	8.40	8.31	5.97
1998	9.97	20.99	19.77	14.72	10.86	8.22	6.26
1999	12.81	27.78	24.99	16.54	13.45	9.88	8.51
2000	14.17	34.46	22.61	18.40	14.26	11.15	10.06
2001	12.80	27.62	21.54	16.84	12.58	8.99	6.14
2002	12.88	26.91	21.92	14.65	13.04	9.99	9.15
2003	12.80	25.66	19.46	16.90	13.37	9.87	7.79
2004	12.66	26.45	20.40	16.63	13.70	9.07	7.34
2005	13.54	27.46	20.52	17.75	14.57	10.75	9.07
2006	12.52	28.28	19.11	16.00	10.27	9.37	11.50
2007	13.88	52.71	16.27	11.83	8.13	6.98	7.79
기간 평균	12.49	28.93	20.79	15.75	12.06	9.33	8.14
기간 증가율	48.95	165.13	-26.46	-9.20	-3.20	-15.93	30.63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계청

- 비정규직 비중의 확대는 5~9인 기업을 중심으로 나타남.

- 1997~2008년 기간 중 5~9인과 200~299인 규모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에서의 비정규직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임.

- 제조업에서 가장 큰 고용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5~9인 기업의 비정규직 비중이 1997년 이후 165% 이상 늘어나면서 전체 제조업에서의 비정규직 비중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이는 노동생산성의 정체와 함께 5~9인 기업의 정규직 고용 동기가 감소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200~299인 기업의 경우 5~9인 기업 다음으로 높은 비정규직 비중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는 이들 기업의 비정규직 비중이 다른 규모의 기업들에 비해 낮은 것에 따른 일종의 기저효과로 해석될 수 있음.

□ 또한 소기업 비중의 확대는 기업 간 급여 차이를 확대시켜 고용의 상대적인 질적 저하를 초래함.

- 영세 소기업 비중 확대에 따른 고용의 질적 저하를 나타내는 지표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차이를 살펴볼 수 있음.

- 노동생산성 및 노동시간 등을 감안하지 않은 임금의 단순비교로는 고용의 임금 측면에서의 질적 저하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 일반적으로 고용이 양질이나 아니냐의 기준으로 임금조건이 가장 많이 고려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두 기업집단 간에 확대되고 있는 임금 격차는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의 상대적인 질적 저하로 해석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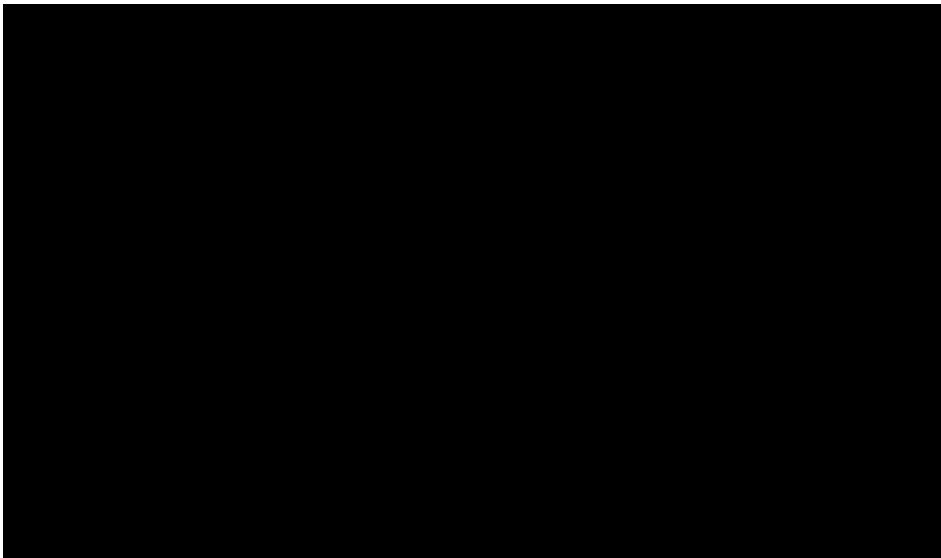
- 1996년 이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더욱 확대되고 있는 임금 격차는 영세 소기업 비중의 확대와 함께 임금 측면에서의 고용의 질적 저하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함(<그림 4> 참조).

- 중소기업 집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낙후된 영세 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면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평균 급여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임.

- 대기업 급여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급여는 1996년 62% 수준에서 2006년에 이르러서는 53% 수준으로 큰 폭 하락함.
- 이는 영세 소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집단의 투자 부진에 따른 노동 생산성 정체로 인해 중소기업의 급여가 대기업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보인 데 기인함.
- 이처럼 영세 소기업 비중 확대는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으나, 임금 구성 면에서 볼 때 저임금 고용의 확대라는 부작용이 있음.
- 저임금 고용 확대에 의한 고용의 질적 저하는 구매력 약화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소기업의 영세화를 촉진하는 악순환 구조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

<그림 4> 기업규모별 급여 비교

(단위: %, 천 원)



주: 종사자 1인당 급여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각 연도

- 낮은 급여와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대변되는 고용의 질적 저하는 소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 만족도 저하로 이어짐.

- 근로자들의 일자리 만족도는 근속연수와 이직률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음.

- 근로자가 자신의 일자리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통계는 찾기 어려움.
- 그러나 자신의 현재 일자리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가 클수록 근속기간이 길고 낮은 이직률을 보일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음.

- 기업규모별 근속연수를 통해 살펴본 일자리 만족도는 5~9인 기업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표 11> 참조).

<표 11> 기업규모별 평균 근속연수

(단위: 년)

구 분	제조업 전체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1999	5.7	4	4.6	5.1	6.1	7	8.3
2000	5.6	4	4.6	5.1	6.1	7.8	8.5
2001	5.9	4.2	4.7	5.4	6.6	7.5	8.8
2002	5.6	3.5	4.3	4.8	6.2	7.2	9.5
2003	5.8	3.9	4.5	5.3	6.4	7.8	9.3
2004	5.9	4.1	4.8	5.3	6.6	7.3	9.1
2005	5.8	3.9	4.6	5.4	6.6	7.7	8.8
2006	5.8	4.1	4.5	5.4	6.8	7.8	9.1
2007	5.9	4.3	4.5	5.4	6.7	7.9	9.2
2008	6	4	4	6	7	8	9
기간 평균	5.8	4	4.51	5.32	6.51	7.60	8.96

자료: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제조업 전체 평균 근속연수는 1999~2008년 기간 중 5.8년으로 나타남.
- 100인 이상 규모의 기업들의 같은 기간 평균 근속연수는 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들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을 시사함.

- 반면 30인 이하 기업의 평균 근속연수는 제조업 전체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9인 기업 종사자들의 근속연수는 기간 평균 4년에 불과함.
- 이는 이들 기업 종사자들의 만족도가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낮을 가능성을 시사함.

-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은 이직률의 비교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음(<표 12> 참조).

<표 12> 기업규모별 이직률 비교

(단위: %)

구 분	제조업 전체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2002	2.54	3.15	3.18	3.21	2.63	1.92	1.16
2003	2.52	2.94	3.44	3.18	2.46	1.8	1.07
2004	2.27	2.8	2.97	2.55	2.23	1.76	1.18
2005	2.51	2.7	3.17	3.26	2.4	1.9	1.11
2006	2.46	2.92	3.23	3.15	2.48	1.7	1.03
2007	2.23	2.54	2.89	2.78	2.15	1.87	0.99
기간 평균	2.42	2.84	3.15	3.02	2.39	1.83	1.09

자료: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 조사 통계

- 제조업 전체 이직률은 2.42%로 나타남.
- 100인 이하 규모 기업의 이직률은 이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특히 10~29인 기업에서의 이직률은 3.15%로 제조업 전체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
- 반면 100인 이상 기업에서의 이직률은 제조업 전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규모가 커질수록 이직률이 현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즉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근로자들의 일자리 만족도가 높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함.

□ 소기업 비중의 확대는 이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고용의 질적 저하를 통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앞서 본 바와 같이 소기업 비중의 확대는 생산성 저하 등을 통하여 임금 및 근로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Rosenzweig(1988)와 Brown et al.(1990) 등은 실증분석을 통해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질적으로 우량한 고용창출을 한다고 보인 바 있음.

-고용의 질적 저하는 구매력 부진을 통해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내수 중심의 소기업 투자를 부진하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4. 기업규모와 거시경제 성장

□ 제조업의 소기업 편중 현상은 경제발전에 따른 자연적인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결과일 수 있음.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산업 내 규모별 기업분포가 변화할 수 있음.

-소기업 편중 현상이 경제발전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일 경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

- 소기업 편중 현상은 앞에서 논의된 경로들을 통해 제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 그것이 산업 간 구조변화에 따른 자연적 변화일 경우 이에 따른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은 긍정적일 가능성도 존재함.
- 따라서 소기업 편중 현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직접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기업의 규모별 분포가 거시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주요 연구로는 Beck et al.(2003)와 Shaffer(2002)가 있음.

- Shaffer(2002)는 미국의 700개 도시의 제조업 자료를 이용하여 도시별 평균 기업규모와 가구소득 성장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성립함을 보임.
- 또한 Beck et al.(2003)는 1990년대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제조업 내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이 높을수록 1인당 GDP 성장률이 높음을 보임.
- 이들의 연구결과는 중소기업 비중 확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그러나 경제성장이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통해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비중을 높일 가능성도 존재함.
- 즉 경제성장과 중소기업 비중 사이에 동시성 편의(simultaneity bias)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럴 경우 위의 분석결과를 중소기업 비중 확대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소기업 비중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 분석을 위해 Beck et al. (2003)의 방법론을 원용함.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중소기업 중에서도 영세 소기업에 속하는 10인 미만 기업의 비중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함.

- 경제성장에 따른 사업 기회 창출 효과가 중소기업 집단 중에서도 영세 소기업에 집중될 이론적 근거는 없음.

- 따라서 중소기업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수행된 기존 연구와 달리 1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함으로써 동시성 편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비중 확대는 기업집단의 영세화를 통해 경제성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음.
- 두 변수 간 관계의 실증분석은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 영세화 논의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분석을 위해 Beck et al.(2003)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함.

- GDP 성장률과 같은 거시경제 변수가 종속변수일 경우 독립변수로 무엇을 포함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Beck et al.(2003)의 방법론을 차용하여 reduced form regression을 실행함.

□ 분석에 사용된 변수 및 자료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종속변수로서 일인당 GDP 성장률을 사용하고, 경제성장 문헌에 따라 인적자본, 투자율, 정부소비, 물가, 개방도, 일인당 GDP를 기본적인 통제변수로 사용함.³⁾

- 인적자본과 투자율은 생산에 직접 투입되어 경제의 성장률을 결정함.
- 본 분석에서 인적자본 수준은 대학 재학생 비중을, 투자율은 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을 대리변수로 사용함.
- 정부의 지출이 클수록 민간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큰 것으로 간주되며, 경제성장 관련 문헌에서는 정부지출은 경제성장과 음(-)의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에서 정부지출은 GDP 대비 정부 최종소비지출로 대신함.

3)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에 대해서는 Sala-i-Martin(1997)과 Barro(1997)를 참조 바람.

- 물가는 국가의 통화정책 환경을 나타내는 대리변수이며, 본 분석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측정함.
- 개방도는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GDP 대비 무역 비중으로 표시됨.
- 경제성장에 있어 수렴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일인당 GDP를 독립변수에 포함함.

- 본 연구의 관심 독립변수인 소기업 비중은 제조업 부문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의 비중을 이용하여 계산함.

- 일반적으로 소기업은 50인 이하 규모 기업을 의미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10인 규모 기업의 경제적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이들 기업을 소기업으로 정의하여 분석을 실행함.
- 소기업 비중은 1~9명 규모의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함.

- 국가 간 제도적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법질서 지수를 분석에 포함

- 경제성장 문헌에서 법질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법질서는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유재산권 보호와 부패수준 등의 차이를 반영하는 종합적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⁴⁾
- 본 분석에서는 사법체제의 독립성과 충실성을 지수화한 Gwartney(2008)의 자료를 사용함.

- 1998~2006년 기간 연도별 자료가 있는 24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자료를 수집하여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함.

- 국가 간 고정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고정효과모형을 사용⁵⁾

4) Butkiewicz and Yanikkaya(2006)와 Knack and Keefer(1995)를 참조 바람.

5) 하우스만 테스트 결과 고정효과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됨.

- 회귀분석식은 다음과 같음.⁶⁾

$$1인당\ GDP\ 성장률_{it} = a_i + b_1 \cdot 독립변수_{it} + b_2 \cdot 소기업\ 비중_{it} + e_{it},$$

$$i = 1...24, t = 1998\sim 2006$$

<표 13> 분석에 사용된 변수

변수명	정의	대리변수	기대 부호	자료 출처
sl	소기업 비중	중사자 1~9명 기업체 수/제조업 전체 기업 수	-	OECD*
income	소득수준	1인당 GDP(불변달러, 2000년)	-	세계은행
price	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	
trade	개방도	무역/GDP	+	
gov	정부지출	GDP 대비 정부 최종소비지출	-	
school	인적자본	대학 재학생 비중	+	
gfgc	투자율	GDP대비 총고정자산형성	+	
legal	법질서	법제도 충실성(integrity) 지수	+	Gwartney et al.(2008)

주: *한국 자료는 통계청

<표 14> 표본국가

Australia	France	Korea Republic	Portugal
Austria	Germany	Luxembourg	Slovak Republic
Belgium	Hungary	Netherlands	Spain
Czech Republic	Iceland	New Zealand	Sweden
Denmark	Ireland	Norway	United Kingdom
Finland	Italy	Poland	United States

6) 모든 변수는 log임.

□ 분석결과는 소기업 비중의 확대는 영세화 채널을 통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표 15>의 두 번째 열(A)은 기본 통제변수들의 적합성 검증을 위해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⁷⁾

- 기본모델에 포함된 변수들 중 인적자본과 1인당 소득은 경제성장에 유의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인적자본의 경우 measurement error 등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흔하며, 경제성장의 수렴효과(convergence effect)를 반영하는 1인당 소득도 고소득 국가들의 경우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그 외 통제변수들은 경제성장 이론의 예측대로 모두 5% 이상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조기업 비중을 포함한 분석결과는 <표 15>의 세 번째 열(B)에서 찾아볼 수 있음.

- 1~9인 규모 기업 비중은 경제성장과 상당히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표 15>의 네 번째 열(C)은 법제도 지수를 분석해 포함했을 때에도 소기업 비중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은 여전히 유의함을 보여주고 있음.
- 법제도 지수를 분석에 포함할 경우, 1~9인 규모 기업의 비중과 경제성장 간 음(-)의 관계의 유의성은 다소 떨어지나 여전히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법제도 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온 것은 법제도의 충실성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OECD 회원국을 표본으로 삼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7) 분석을 위해 white-heteroskedasticity consistent estimator를 이용함.

<표 15> 소기업 비중과 경제성장률의 관계

변수	A	B	C
school	0.001	0.030***	0.026***
gfgc	0.048***	0.063***	0.064***
gov	-0.157***	-0.157***	-0.126***
price	-0.012***	-0.009***	-0.006***
trade	0.057**	0.072***	0.097***
income	0.017	-0.045**	-0.014
s1	-	-0.018**	-0.006*
legal	-	-	-0.006
Adjusted R ²	0.438	0.634	0.642

주: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함.
- 즉 최근 들어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10인 이하 사업체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현재 중소기업 정책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음을 말해 줌.
 - 그러나 국제수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소기업 비중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Ⅲ. 기업규모의 거시경제적 결정요인

1. 보편적 요인

□ 금융발전 수준

- 금융발전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되는 금융산업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의 발전을 의미함.⁸⁾

- 금융산업의 주요 기능으로는 투자기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자본의 재분배, 투자 감시 기능을 통한 도덕적 해이 방지, 투자 리스크 관리 및 분산, 저축 활성화, 신용 창출을 통한 거래 활성화가 있음.
- 금융발전 수준은 이 다섯 가지 기능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정됨.

- 금융발전은 불완전한 자본시장 구조하에서 자본의 효율적 배분과 기업이 직면한 자금조달 여건의 개선을 통해 기업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기업규모의 확대를 가져옴.

- 금융산업이 미발달된 경우, 기업들은 내부자금에 더욱 의존하게 됨.
-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에 비해 기업성장성 제고에 쓰일 수 있는 내부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을 것임.
- 따라서 금융산업의 미발달은 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를 어렵게 하여 영세화 현상을 가중할 수 있음.

- 금융발전이 기업성장을 촉진함을 밝힌 연구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Rajan and Zingales(1998)은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금융시장이 발전한 국가일수록 외부금융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성장이 더욱 빨랐음을 보임.

8) Levine(2005)

- Love(2003)는 40개국의 기업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금융발전은 내부자금에 대한 투자민감도로 대리된 금융제약을 완화하여 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임을 밝힘.
- Beck et al.(2003)는 4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규모는 은행산업의 크기와 양(+)의 관계를 가짐을 보임.⁹⁾
- Beck et al.(2005)는 54개국의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금융과 법제도 등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금융 및 법제도가 발달한 나라의 기업일수록 기업성장을 억제하는 금융제약의 영향을 덜 받음을 보임.
- 특히, 영세기업일수록 금융제약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금융제도의 발달은 영세기업에 가장 큰 수혜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이와 관련하여 산업연구원(2009)은 1994~2007년 기간 기업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금융발전은 기업의 금융제약을 완화시켜 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을 밝힘.

□ 기업환경

- 규제와 기업규모

- 기업 관련 규제는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저해하여 기업규모의 축소를 초래함.
-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 졸업 시 과거에 비해 더욱 엄격하고 까다로운 규제 등을 적용받게 되며, 이는 기업의 규모 확대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¹⁰⁾
- OECD 국가는 규제 제도의 정비와 개선을 통해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미국의 경우, 2002년 대통령령(Presidential Executive Order)은 1996년 입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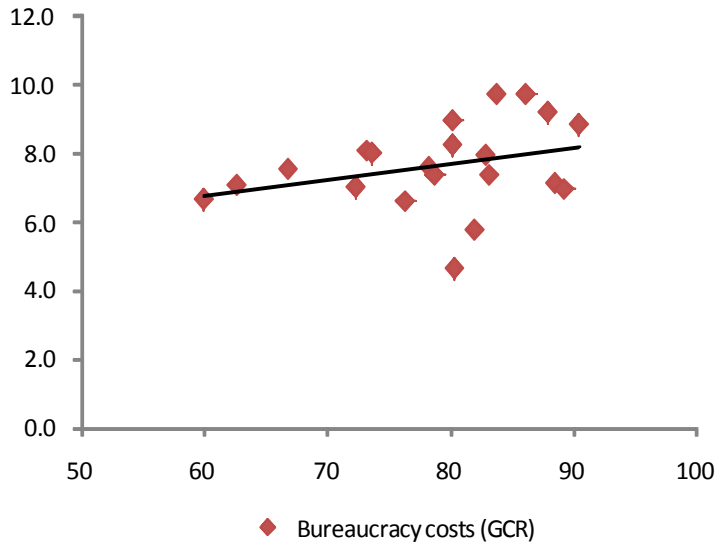
9) Beck et al.(2003)

10) 대한상공회의소(2009)

화된 The Regulatory Flexibility Act를 토대로 각종 정부규제와 정책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 중소기업들이 연간 57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¹¹⁾

- <그림 5>는 OECD 국가의 경우 규제비용의 증가가 중소기업 비중의 증가와 양(+)의 관계를 가짐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5> OECD 주요국의 규제비용과 중소기업 비중



주: 2004년 기준. Bureaucracy costs는 관료비용이며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에너지 관련, 환경규제를 제외한 기타 경제행위 관련 규제의 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수임.
 자료: Gwartney et al.(2008)

- 법제도의 효율성과 기업규모

- 기업규모와 관련한 법제도의 효율성이란 기업의 활동, 특히 투자를 통한 수익에 대한 투자자 혹은 기업의 소유권이 잘 보장되어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효율적인 법제도를 가진 나라일수록 기업의 투자동기가 더욱

11) OECD(2005a)

왕성할 것이며 그 결과 기업의 규모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Kumar et al.(1999)는 유럽 15개국의 산업별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별, 국가별 평균 기업규모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고, 효율적인 법제도가 기업규모의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밝힘.
- Beck et al.(2003)는 44개국을 표본으로 기업규모와 금융기관 및 법제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자와 후자 간 양의 관계가 성립함을 보임. 반면 투자자 보호가 약한 나라일수록 자본투자 보호를 위해 기업이 금융기능을 내재화하면서 기업규모가 커진다는 것을 발견함.
- Allen et al.(2005) 또한 중국 상장기업들을 표본으로 소수 주주자들의 법적보호가 약할수록 상장기업의 성장이 저해됨을 밝힘.

□ 시장규모와 경제발전

- 시장규모의 확대는 기업의 전문화와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함으로써 기업 규모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아담 스미스가 시장 확대에 의한 기업의 전문화와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기업규모의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로 이에 관한 많은 이론적 탐구들이 수행되고 있음.
- 그러나 시장 확대에 의한 기업규모의 확대는 기존 사업체의 경우에 한해 적용됨.
- 즉 기존 사업체의 경우 시장의 확대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공정의 확대와 고용 증대로 이어져 사업체 규모의 확장으로 나타날 수 있음.
- 그럴 경우, 산업 내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반면 중소기업의 비중은 감소하게 될 것임.
- 이와 관련한 주요 실증분석 연구로는 포르투갈의 제조업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장규모와 창업기업 규모 간 양(+)의 관계가 성립함을 보인 Mata(1996)가 있음.
- Mata의 결론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시장규모가 큰 나라의

소기업 비중이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작음을 시사함.

- 같은 맥락에서 무역에 대한 개방도 확대 또한 시장의 확대를 통해 기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Caves et al.(1980)는 국제무역에 대한 개방도가 증가할수록 최적 기업규모도 증가함을 보인 바 있음.

- 반면 시장규모의 확대는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을 통해 신흥기업의 시장 진입을 유도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신설 기업은 기존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시장 확대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신설 기업의 대거 시장진입을 초래할 경우, 시장 확대로 인해 소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산업성장의 대부분이 기존 사업체의 규모 확대에서 비롯됨을 보인 Rajan and Zingales(1998)의 결론은 시장규모의 확대가 소기업의 비중 확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함.
- 결론적으로 시장규모의 확대가 소기업 비중에 미치는 영향은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해야 할 이슈라고 할 수 있음.

- 경제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규모가 확대된다는 가설은 Lucas(1978)에 의해 제기됨.

- Lucas(1978)에 따르면 개인의 직업 선택은 임금근로자와 기업가로 나뉘게 되며, 기업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적자본 수준을 요구받는 대가로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은 보상을 받음.
- 또한 그의 모형은 균형상태의 기업규모는 평균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기업가의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함.
- 그의 이론에 따르면, 경제발전에 따른 임금 증가는 개인으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노력이 요구되는 기업가보다는 임금근로자를 직업으로 선택

하게 하는 효과를 보임.

- Lucas(1978)는 미국의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기업규모와 1인당 GNP 간 양(+)의 관계가 성립함을 보임으로써 경제발전이 기업규모를 확대시킴을 실증적으로 확인함.

- 그러나 국가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중소기업의 수가 많음을 밝힌 Kozak(2005)의 연구결과는 Lucas(1978)의 결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음.

- 그러나 Kozak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지 않음.
- 결국 경제발전과 중소기업 비중 간의 관계도 시장규모와 중소기업 비중 간 관계와 같이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위에서 논의된 변수들과 중소기업 비중의 관계 분석을 위해 고정 효과모형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함.¹²⁾

- 분석을 위해 앞 장과 같이 1998~2006년 기간 24개 OECD 회원국을 이용함.

- 본 연구에서는 기업을 종사자 수로 구분한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를 이용하여 기업규모를 측정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제조업 내 중소기업 비중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것임.
- 기존의 문헌들은 산업 내 기업의 평균 자산 크기나 평균 종사자 수를 기업규모의 대리변수로 삼음.
- 중소기업의 고용자 비중을 사용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에 더욱 부합된다고 할 수 있으나 자료 부족으로 중소기업 사업체 수의 비중을 대신 사용함.
- OECD(2005a)가 2002년에 한해 제공하고 있는 주요 회원국의 기업규모별 사업체 수 비중과 종사자 비중 통계자료를 검토한 결과, 두 변수의

12) 분석을 위해 white-heteroskedasticity consistent estimator를 이용함.

상관계수가 0.6으로 나타나 기업규모별 사업체 수 비중이 종사자 수 비중을 대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분석에 쓰인 변수들은 <표 16>에 나타나 있음.¹³⁾

- 종속변수로서 앞에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1~9인 규모 기업의 비중을 사용함.
- 금융기관의 효율성, 즉 국가 간 금융시장 발달수준의 반영을 위해 Beck et al.(2000)의 금융시장 관련 자료 중 GDP 대비 은행의 민간신용 총액 (private credit by deposit money banks/GDP)을 이용함.¹⁴⁾
- 기업 관련 규제환경과 법제도의 효율성을 반영하기 위해 Gwartney (2008)의 관료비용 및 해고비용 지수, 법제도 지수를 사용함.
- 시장규모는 총인구수를 사용하여 내수시장의 크기를 대리하고 무역비중을 사용하여 해외시장의 규모를 측정함.
- 경제발전 수준은 1인당 GDP로 측정함.

<표 16> 분석에 사용된 변수

변수명	정의	대리변수	기대부호	자료 출처
income	경제발전 수준	1인당 GDP(불변달러, 2000년)	?	세계은행
pop	내수시장규모	총인구수	?	
trade	해외시장규모	무역/GDP	?	
legal	법질서	법제도 충실성(integrity) 지수	-	Gwartney et al.(2008)
bureau	관료비용	관료비용 지수	-	
dismissal	해고비용	강제 해고비용 지수	-	
pc	금융발전수준	GDP 대비 은행의 민간신용 총액	-	Beck et al.(2000)

주: Gwartney et al.(2008)의 관료비용 지수와 강제 해고비용 지수는 높은 수치일수록 관련 비용이 적게 들을 의미함.

13) 모든 변수는 log값임.

14) De Gregorio and Guidotti(1995)는 문헌에서 제시된 많은 금융발전 지수들 중 이 지수가 금융권의 중개기능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주장함.

□ 분석결과

- 7월중분석 결과 대외무역 개방이 소기업 비중을 줄이는 가장 주요 요인임을 보여줌(<표 17> 참조).
 - 해외시장 크기를 나타내는 개방도는 소기업 비중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 시장규모를 대리하는 변수 중 내수시장의 크기를 반영하는 인구수는 소기업 비중과 음(-)의 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발전 또한 소기업 비중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보였으나 유의성이 다소 떨어짐.
 - 규제환경을 대리한 변수 중 관료체제로 인한 비용부담이 줄어들수록 소기업의 비중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고비용은 소기업 비중의 결정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법제도 충실성 지수는 소기업 비중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17> 소기업 비중의 거시경제적 결정요인 분석

변수	A	B	C
pop	-0.683*	-1.347	-0.606*
trade	-0.308*	-0.324**	-0.309**
income	0.619*	0.772*	0.607
pc	-0.018*	-0.069*	-0.005*
legal	0.001	-	-
bureau	-	-0.017*	-
dismissal	-	-	-0.003
Adjusted R ²	0.898	0.898	0.891

주: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 분석결과 평가 및 한계점

- 분석결과는 소기업 비중의 축소를 위해서는 시장규모 확대와 금융시장 발전, 관료비용의 부담 완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 경제발전과 소기업 비중 간의 관계는 Kozak(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나 경제발전이 어떤 경로를 통해 소기업의 비중을 확대하는지는 분명치 않으며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됨.
 - 경제발전은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을 반영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성장기회의 포착을 노린 소기업의 수가 늘어날 수 있을 것
 - 그러나 이것이 소기업의 비중 증가로 이어지는지는 불투명함.
- 분석결과는 내수시장과 해외시장의 확대에 의한 기존 사업체의 확대 유인이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 유인보다 클 가능성을 시사함.
 - 그러나 내수시장 확대와 소기업 비중 간 관계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다소 떨어져 이 부분의 다소 조심스러운 해석이 요구됨.
 - 차후 시장 확대와 소기업 비중 간의 더욱 엄밀한 관계 분석을 위해 산업조직론 측면에서의 접근이 요구됨.
- 본 실증분석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주요국을 대상으로 소기업 비중 결정에 대한 평균적인 분석을 시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을 설명하는 데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거시경제적 결정요인들의 소기업 비중에 대한 영향에 대한 추정치는 표본국들의 평균치로 해석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실증분석만으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소기업의 경제적 비중이 훨씬 높음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우리나라 고유의 현실을 감안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

2. 국내 특수요인

(1) 온정주의적 중소기업 정책기조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은 구조조정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임.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은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기업의 부채비율을 살펴볼 수 있음.

- 특히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투자 과열로 인한 우리 기업의 과도한 부채 수준 때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의 부채비율 변화는 구조조정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음.

-외환위기 이후 부채비율의 추세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구조조정에 소극적이었음을 보여줌.

- 대기업의 경우 1997~2007년 기간 부채비율이 연평균 13% 이상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반면,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이보다 낮은 수준인 10%대의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중소기업 집단의 구조조정 노력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남(<표 18> 참조).

- 1997~2007년 기간 중 중소기업 집단 내 기업규모별 부채비율 동향을 살펴보면, 50인 미만 기업의 부채비율 증감률은 연평균 -5%대에도 미치지 못해 중소기업 전체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기록함.
- 특히 10~19인 기업의 부채비율 증감률은 가장 낮은 수준인 연평균 -2.1%를 기록함.
- 5~9인 기업의 경우 외환위기 직후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부채비율

감소세를 보였으나 1998년 이후 김대중 정부 기간(1998~2002년)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평균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5%대의 감소를 보인데 그침.

- 반면 50인 이상 중기업의 구조조정은 훨씬 강도 높게 이루어져 이들 기업이 중소기업 전체의 구조조정을 주도해 나간 것으로 나타남.

<표 18> 기업규모별 부채비율

(단위: %)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199인	200~299인
1997	390.00	418.40	221.27	240.68	298.73	382.19	415.01	410.19
1998	295.38	334.37	167.7	227.63	303.03	376.2	270.51	240.32
1999	208.94	232.38	159.09	194.24	263.29	233.44	212.79	154.04
2000	224.59	179.71	131.4	206.86	252.4	199.34	195	151.5
2001	201.63	144.74	131.6	175.43	210.98	181.46	165.51	137.46
2002	128.88	152.08	157.59	201.04	202.75	173.25	148.44	128.54
2003	113.49	147.57	160.51	196.05	206.14	162.96	131.49	108.24
2004	91.68	138.65	169.75	193.57	193.36	150.35	139.01	119.72
2005	86.13	140.90	143.75	173.6	185.34	162.58	123.03	105.77
2006	85.49	132.59	131.89	165.57	168.39	144.97	126.7	129.63
2007	85.25	129.08	128.61	184.8	185.17	144.3	124.65	130.62
연평균 증감률	-13.06	-10.36	-4.53	-2.13	-4.40	-8.45	-10.58	-8.82

주: 증감률은 연평균임.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경영지표

□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이 구조조정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정부의 온정주의적 지원정책에 기인하는 바가 큼.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은 1990년대 이후 혁신 중심으로 기조 전환을 시작했으나 여전히 중소기업에 대한 온정주의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음.¹⁵⁾

<표 19> 중소기업 지원예산 증가 추이

(단위: 백만 원)

구 분	중소기업 지원예산	전체 정부예산	중소기업 지원비율
1992	23,639	33,362,459	0.1%
1993	20,393	37,268,004	0.1%
1994	35,910	42,794,678	0.1%
1995	28,780	51,498,089	0.1%
1996	103,257	58,480,817	0.2%
1997	921,531	63,962,100	1.4%
1998	1,991,345	73,225,982	2.7%
1999	2,150,618	80,509,887	2.7%
2000	1,431,229	87,464,491	1.6%
2001	1,596,659	98,668,535	1.6%
2002	1,664,981	108,918,281	1.5%
2003	1,842,440	117,222,909	1.6%
2004	2,091,478	118,236,238	1.8%
2005	1,431,704	134,207,676	1.1%
2006	1,881,847	144,836,014	1.3%
증가배율 (1992~2006년)	79.6배	4.3배	-

주: 일반회계 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결산개요』, 각 연도, 김주훈 외 2인, 『위기극복 이후의 중소기업 구조조정: 외환위기 경험을 중심으로』, KDI 재인용, 2009.

-특히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표 19>는 중소기업 지원예산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 1992~2006년 기간 전체 정부예산은 4.3배 늘어난 것에 비해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약 80배 확대되었음.

15) 송원근(2008)을 참조 바람.

- 특히 정부예산에서 중소기업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0.1% 수준에서 2%가 넘는 수준으로 크게 확대됨.
- 2000년 이후 중소기업 지원비율이 다소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이렇듯 외환위기 기간에 크게 강화된 중소기업 정부지원은 경제 정상화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보다 부실기업의 퇴출지연에 더욱 크게 작용함.¹⁶⁾

□ 정부의 지원 확대 아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방출된 유휴자원이 저성장 산업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소기업이 난립하는 상황이 발생함.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그 과정에서 방출된 유휴자원을 흡수하는 채널로서 창업이 중요한 역할을 함.

- <표 20>은 외환위기 이후 창업 및 부도기업 동향을 보여주고 있음.

<표 20> 전국 신설 및 부도법인 동향

(단위: 개)

구 분	신설법인 수	부도법인 수	창업배율 (신설/부도)
1997	21,075	6,132	3.4
1998	19,227	7,538	2.6
1999	29,976	2,429	12.3
2000	41,460	2,800	14.8
2001	39,609	2,349	16.9
2002	38,972	1,973	19.8
2003	52,739	3,214	16.4
2004	48,585	2,747	17.7
2005	52,587	2,200	23.9

주: 창업배율=신설법인 수/부도법인 수

자료: 중소기업정책연구DB, 월간 신설법인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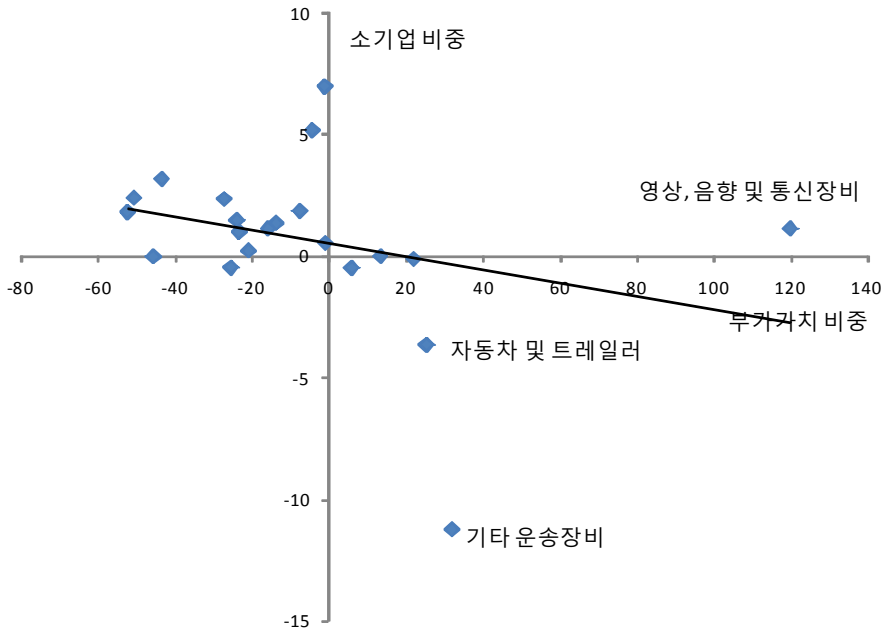
16) 김주훈 외(2009)

- 1997~1998년 기간 부도법인의 3배 수준이었던 신설법인 수는 1999년 들어 12배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고, 이후 창업배율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함.
- 이와 관련하여 조덕희(2005)는 1990년대 이후 제조업 창업활동과 영세 소기업 비중 간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인 바 있음.

-중소기업 창업은 주로 성장둔화 업종 및 저수입 업종에서 대기업이 남긴 공백을 메우는 형식으로 나타났고, 그 과정에서 영세 소기업이 난립하는 현상이 발생함.

- <그림 6>은 2000년대 이후 제조업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의 변화와 50인 미만 기업의 사업체 수 비중 간 관계를 보여주고 있음.

<그림 6> 제조업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과 소기업 비중의 관계



주: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가로축)은 2001~2007년 증감률, 소기업 비중변화(1~49인, 세로축)는 2001~2006년 증감률임.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통계연보; 중소기업중앙회

- <그림 6>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일반적으로 부가가치 비중이 감소한 업종(저성장산업)들을 중심으로 50인 미만 사업체의 비중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소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함.
- 2003년을 기준으로 출하액 기준 제조업 내 중소기업 비중이 90%(제조업 평균 중소기업 비중은 50.7%)인 데 비해 2001~2007년 기간 120%의 부가가치 비중 증가세를 보인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업종 부문에서의 비중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¹⁷⁾
- 성장둔화 업종에서의 소기업 난립 현상은 경제논리상 장기간 지속될 수 없으나 당시 시대상황과 영세기업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기조 등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됨.

(2) 민간소비의 장기 침체

□ 민간소비의 장기 침체는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통해 투자부진으로 이어져 영세화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제조 중소기업은 수출보다는 내수판매 의존도가 매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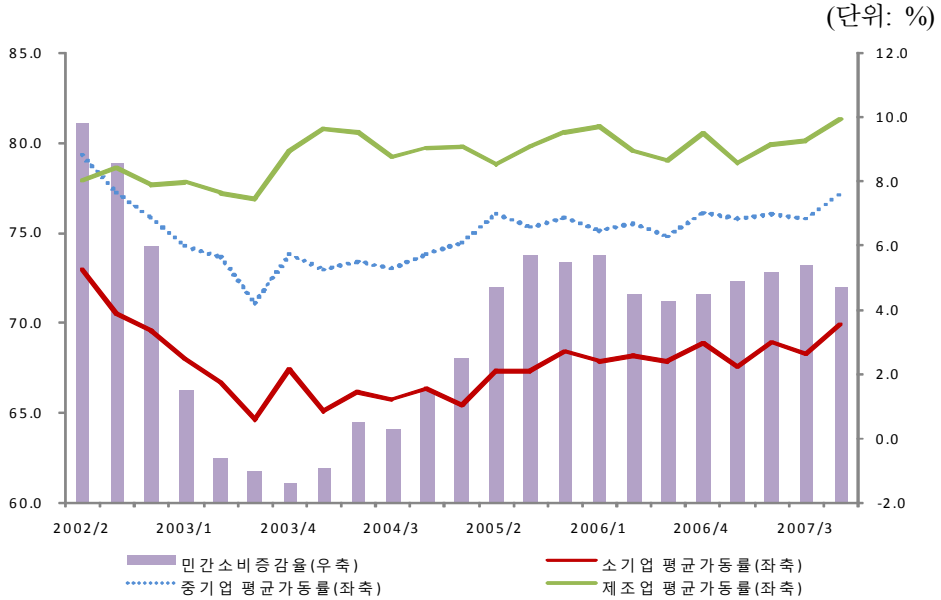
- 조덕희(2006)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평균 83.2%가 내수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로 인해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의 평균가동률은 민간소비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임.

- <그림 7>은 2002년 2/4분기 이후 민간소비 증감률과 기업규모별 평균가동률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음.
- 이에 따르면 2003년 이후 민간소비의 변화에 중소기업의 평균가동률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음.

17) 조덕희(2006)

<그림 7> 민간소비와 기업규모별 평균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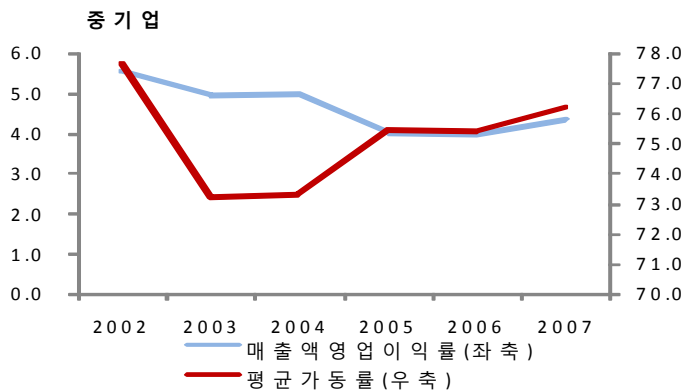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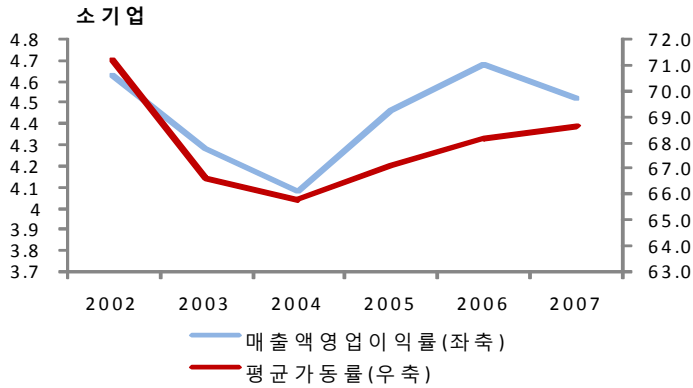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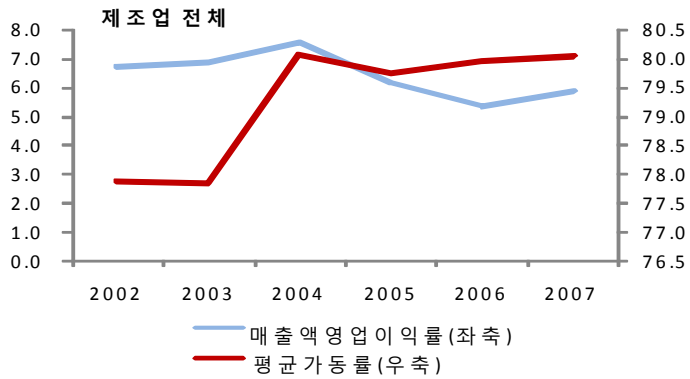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중앙회

- 즉 2002년 2/4분기에서 2007년 4/4분기 기간 중 민간소비는 3.1의 변동성을 보임에 따라, 제조업 전체 평균가동률은 1.2의 변동성을 보인 데 반해 중기업은 1.7, 소기업은 1.9의 변동성을 보임.¹⁸⁾
- 민간소비는 2003년 1/4분기를 전후하여 큰 낙폭을 기록함.
- 이에 따라 2003년 1/4분기를 중심으로 전후 3분기 간 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은 -0.26%의 감소세를 보였음.
-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평균가동률은 이보다 낙폭이 훨씬 커서 중기업의 경우 -5.98%의 평균가동률 감소를 보였고 소기업은 -6.74%의 감소세를 보임.
- 이후 민간소비가 다소 회복되면서 제조업 전체 평균가동률도 동반 회복세를 보여 2007년 4/4분기에 이르러서는 2002년 2/4분기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18) 변동폭은 표본 기간 내 평균의 1 표준편차임.

<그림 8> 평균가동률 vs. 매출액 영업이익률

(단위: %)



주: 2002년은 3~12월임.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 반면 중소기업의 평균가동률은 여전히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미진함을 알 수 있음.

- 민간소비의 부진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평균가동률 저하는 다시 이들 기업의 수익성 부진으로 이어짐.

- <그림 8>은 2000년대 이후 기업규모별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평균가동률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음.
- 제조업 전체의 경우,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평균가동률 간 상관계수는 -0.35로 나타나 수익성이 평균가동률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중기업의 경우에도, 두 변수 간 상관계수가 0.08로 나타나 평균가동률 변화가 수익성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반면, 소기업의 경우, 두 변수 간 상관계수가 0.78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기업의 수익성이 평균가동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함.

- 앞 장에서 본 바와 같이 수익성 악화는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의 투자 부진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영세화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3) 가격 위주의 국제경쟁력

□ 중국 등 개발도상국 경제의 부상은 우리나라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저임금을 앞세운 중국과 동남아국가 등의 세계무대 진출로 우리나라 경공업 제품의 국제적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음.

- <그림 9>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부문별 무역수지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 우리나라의 공산품 무역수지 흑자는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증가

세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공산품 무역수지 흑자 증가율(연평균): 4.9%(1990~1996) → 22.5%(1997~2003)

-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부가가치 산업인 IT와 중화학 부문이 호조를 보이면서 공산품 전체 무역수지를 주도해 나갔기 때문임.

* 중화학제품 무역수지(연평균, 달러): -5.8억(1990~1996) → 66.4억(2001~2007)

* IT제품 무역수지(연평균, 달러): 4.7억(1990~1996) → 32.6억(2001~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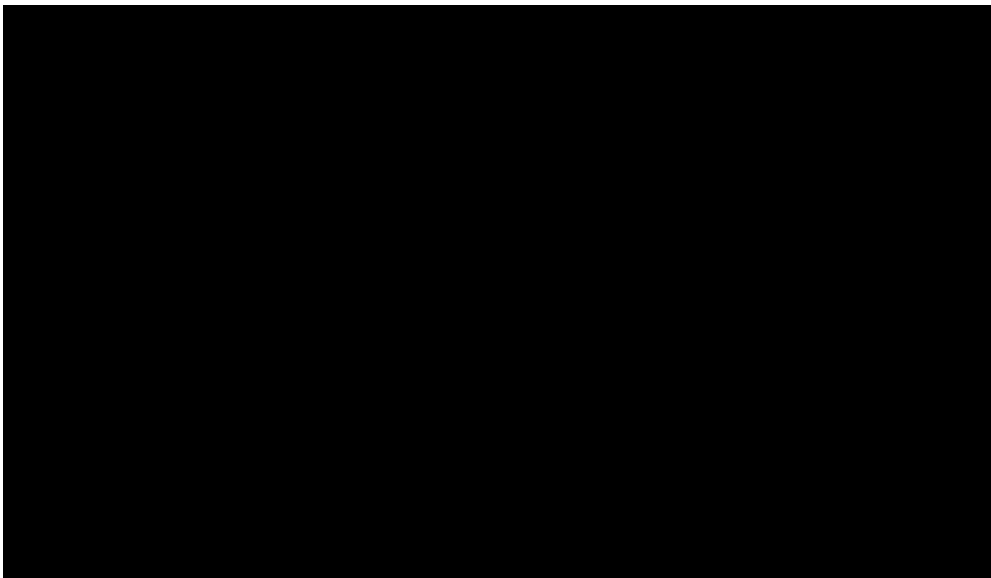
- 반면 1990년대 중반까지 공산품 무역수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저부가가치 경공업 제품 무역수지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

* 경공업 무역수지(연평균, 달러): 18.8억(1990~1996) → 9.6억(2001~2007)

- 이는 중국 등 신흥개발국이 본격적으로 국제무대에 진입하면서 저가 위주의 국내 경공업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킨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¹⁹⁾

<그림 9> 제조업 부문별 무역수지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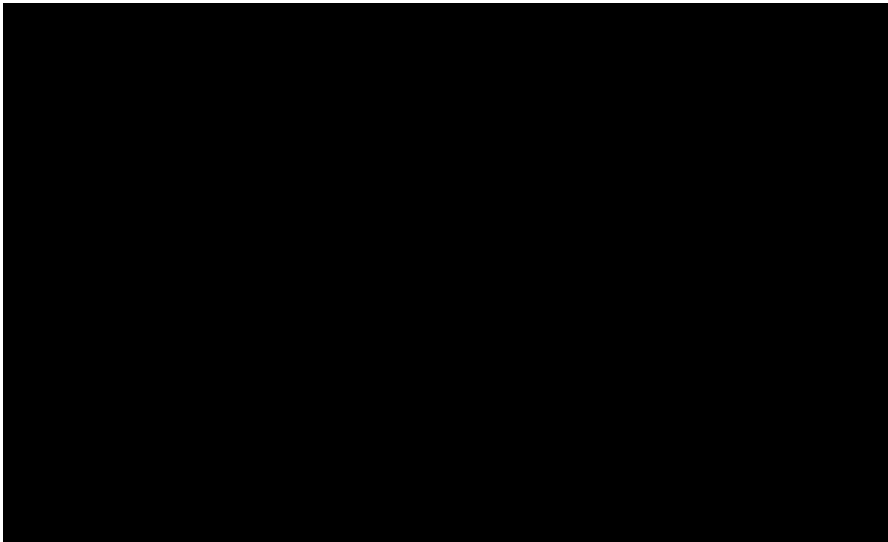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19) 김필현(2009)

-이와 더불어 국내 중소기업의 입지도 큰 타격을 받고 있음.

- 국내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낮은 임금을 기반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동집약적 성격을 띠고 있음.²⁰⁾
- 세계화에 따른 중국 등 개발도상국 경제의 부상은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²¹⁾
- 중국 등의 영향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입지가 위축되고 있음은 중국으로부터의 소비재 수입과 국내 중소기업 사업체 수의 추이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음(<그림 10> 참조).
- 중국산 소비재 수입은 1999~2003년 기간 중 연평균 약 22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이후 2004~2008년 기간에는 연평균 약 71억 달러로 세 배 이상 증가했음.
- 중국산 제품 수입의 큰 폭 확대는 국내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삼고 있던 중소기업의 입지를 위협하여 2000~2003년 기간 연평균 2.2%이던 중소기업 사업체 수의 증가세가 2004~2006년 기간 중 0.55%로 크게 감소함.

<그림 10> 2000년대 중국 소비재 수입과 국내 중소기업 사업체 수 추이



20) 송원근(2008)

21) 김주훈(1996)

□ 가격경쟁력 회복의 일환으로 기업 간 수직적 분업체계가 더욱 심화되면서
소기업의 경제적 비중이 더욱 커짐.

-중국 등의 부상과 함께 주요 경쟁국에 비해 과도한 단위노동비용 증가세
는 비용절감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표 21>은 1998~2007년 기간 중 우리나라와 주요 경쟁국 간 단위노동
비용의 증가율을 비교하고 있음.²²⁾
- 우리나라의 단위노동비용은 외환위기 직후 미국(-0.48%)이나 일본(-1.7%)
보다 높은 감소세(-5.86%)를 보였으나 싱가포르(-6.3%)나 대만(-6.88%)보다
는 감소폭이 낮았음.
- 2003년 이후 우리나라의 단위노동비용은 주요 경쟁국과는 대조적으로
다시 큰 폭의 증가세(5.88%)를 보임.
- 주요 경쟁국에 비교해 과도한 단위노동비용 증가세는 주로 대기업의
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데 기인함.²³⁾
- 과도한 단위노동비용 증가세는 비용절감 압력을 더욱 가중시키는 추가
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표 21> 주요 경쟁국 단위노동비용 증감률 비교

(단위: %)

연 도	미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1998~2002	-0.48	-1.7	-5.86	-6.3	-6.88
2003~2007	-1	-3.8	5.88	-0.38	-2.34
1998~2007	-0.74	-2.75	0.01	-3.34	-4.61

주: 증감률은 연평균임.

자료: 미국 노동통계국

22) 단위노동비용은 (총생산/노동투입시간)/(총노동비용/노동투입시간)으로 계산되며, 재화
1단위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나타냄.

23) 허찬국 외(2007)

-비용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회복의 일환으로 기업 간 수직적 분업체계가 더욱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영세화도 가속화됨.

-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이 싼 중소기업과의 수직적 분업체제 구축은 임금증가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를 만회하는 중요한 방편이 되고 있음.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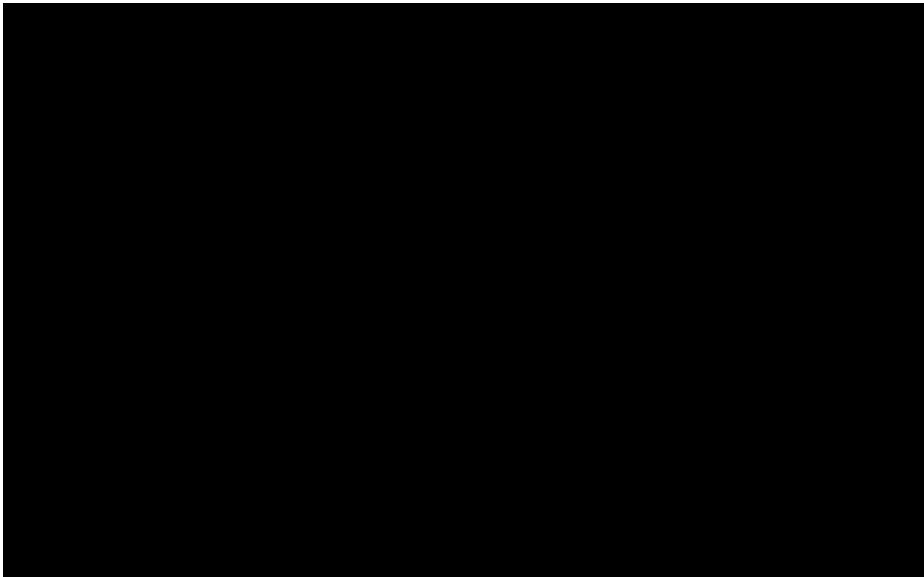
- 또한 전체 제조 중소기업의 60~70%가 하도급 거래 수급 중소기업인 상황에서 가격경쟁력 회복을 위한 평균 납품단가의 하락은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하락으로 이어짐.²⁵⁾

* 평균 납품단가 추세: -2.6%(2001) → -3.9%(2002) → -6.6%(2003)

- 비용절감 압력이 중소기업에 치우치고 있음은 기업규모별 매출액 순이익률의 비교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음(<그림 11> 참조).

<그림 11>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익성 비교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4) 김주훈(1996)

25) 조덕희(2006)

- 1998~2002년 기간 중 연평균 -0.8% 수준이던 대기업의 매출액 순이익률은 이후 2003~2007년 기간 중 6.3%로 크게 개선되었음.
- 그러나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매출액 순이익률은 1.7%에서 2.6%로 1%p 미만의 소폭 개선에 그침.
- 국내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대기업과 수직적 분업체계를 이루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중소기업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비용절감이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 중소기업의 수익성 위축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노력은 결국 중소기업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켜 이들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훼손하고 영세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IV.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 우리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1990년대 이후 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제조업 부문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사업체 및 고용 비중, 생산액 비중은 1993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 300명 이하 중소기업 집단을 종사자 규모별로 세분해 보았을 때 1996년 이후 5~19명 규모의 중소기업의 고용 및 사업체 비중이 크게 확대됨.

○ 1996~2006년 기간 5~9명 규모의 소규모 사업체 비중이 가장 크게 확대되었으며(25.4%), 10~19명 규모의 사업체 비중도 그 다음으로 크게 확대됨(10.3%).

○ 이들 두 기업집단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세는 더욱 커 같은 기간 5~9명 기업의 고용 비중이 47.1%, 10~19명 기업의 고용 비중은 29.9% 확대됨.

□ 국내 제조업의 소기업 편중 현상은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심한 수준임.

- 한국의 10명 미만 기업의 사업체 비중과 고용 비중은 2002년 기준으로 각각 88.6%와 42.9%를 기록하여 주요 선진국 평균인 73.9%와 13.9%를 크게 상회

○ 사업체 비중 면에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인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스웨덴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체들의 고용 비중은 각각 11.6%, 9%, 12%, 19.1%, 11.1%의 낮은 수준을 기록

□ 소기업 편중 현상의 경제적 영향

-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투자여력의 부족으로 성장성 제고를 위한 투자나 연구개발 활동이 부진함.

- 소기업의 경제적 비중 확대는 투자와 기술혁신 노력의 부진을 초래하고 노동생산성의 제고와 혁신을 어렵게 하여 국내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중소기업 비중의 확대는 고용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소기업 비중 확대는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로 이어져 고용의 질적 저하를 초래함.
- 또한 기업 간 급여 차이를 확대시켜 고용의 상대적인 질적 저하를 초래함.
- 낮은 급여와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대변되는 고용의 질적 저하는 소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 만족도 저하로 이어짐.
- 고용의 질적 저하는 구매력 부진을 통해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내수 중심의 소기업 투자를 부진하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중소기업 비중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비중의 확대는 영세화 채널을 통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통계분석 결과, 1~9인 규모 기업 비중은 경제성장과 상당히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소기업 비중의 결정요인

- 표면적 요인

- 금융발전은 불안정한 자본시장 구조하에서 자본의 효율적 배분과 기업이 직면한 자금조달 여건의 개선을 통해 기업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기업규모의 확대를 가져옴.
- 기업 관련 규제는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저해하여 기업규모의 축소를 초래함.
- 효율적인 법제도는 기업의 투자동기를 제고시켜 기업규모의 확대를 촉진함.
- 시장규모의 확대는 기업의 전문화와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함으로써 기업규모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추가적으로 Lucas(1978)는 경제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을 이론적 모형을 이용하여 제시함.
- 실증분석 결과는 대외무역 개방이 소기업 비중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요인임을 보여줌.

- ㄱ 국내 특수요인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온정주의적 중소기업 기조로 인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정부의 지원 확대 아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방출된 유휴자원이 저성장 산업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소기업이 난립하는 상황이 발생함.
- 또한 민간소비의 장기 침체는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통해 투자부진으로 이어져 영세화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세계화로 인해 국제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비용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회복의 일환으로 기업 간 수직적 분업체계가 더욱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영세화도 가속화됨.

□ 본 연구의 한계점

- 위에서 논의된 우리 제조업의 소기업 편중 현상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주로 외환위기 이후 일어난 변화들을 중심으로 전개됨.

- 소기업 편중 현상이 그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원인은 다소 한계가 있음.
- 거시경제적 변수 이외에 산업 조직론을 토대로 한 더욱 세분화된 추가 연구가 필요함.

2. 정책대안

-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책대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제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폭넓은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강도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현행 중소기업 정책기조를 강력하고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한계 기업 퇴출 및 우량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라는 국제적 추세를 따라가고는 있으나 여전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지원이 중요한 정책흐름으로 자리잡고 있음.
 - 보호를 목적으로 한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감퇴를 초래하며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에 성공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함.²⁶⁾
 - 이에 따라 선도기업의 비중이 외환위기 이전 95.5%에서 2000년대 들어 47.5%로 크게 감소한 반면, 한계기업의 비중은 0.9%에서 15.3%로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함(<표 22> 참조).
 - 따라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퇴출비용을 관련 제도의 재정비를 통해 합리화하여 한계기업의 퇴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표 23> 참조).

26) 조덕희(2006)

<표 22> 제조업의 선도 및 한계집단 구성비중 변화

(단위: %)

구 분	1991~1997	2000~2003
선도집단	95.5	47.5
중간집단	3.5	37.2
한계집단	0.9	15.3

주: 선도집단은 1인당 부가가치와 유형고정자산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기업을, 한계집단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기업을 의미함.

자료: 장석인, 「제조업의 양극화 실태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양극화 문제 해소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

<표 23> 기업퇴출의 기간 및 비용의 국제비교

(단위: 년, %)

구 분	한국	일본	미국	싱가포르
파산시간 ¹⁾	1.5	0.6	1.5	0.8
파산비용 ²⁾	4	4	7	1
파산지수 ³⁾	91	93	88	99
법원개입지수 ⁴⁾	67	33	33	33

주: 1) 파산을 완료하는 데 들어가는 연단위의 기간

2) 파산자산가치 중 파산과정 전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퍼센트로 표시

3) 파산제도가 완전히 작동하는 경우 100, 불작동인 경우 0으로 표시(2004년 자료)

4) 높은 값은 파산과정에 법원의 개입 정도가 높음(2004년 자료).

자료: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09*, 2009; 이병기(2004)

- 동시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잠재성이 높은 혁신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산학과 연계한 기술지원과 경영노하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최근 금융위기 관련 일부 산업에 국한되어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최근 국제금융위기로 위기를 맞은 건설업과 조선업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그 외 제조업중 부문에서는 소득보전과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영세 소기업과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러한 현재 추세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당시의 중소기업 보호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음.
- 앞서 보았듯이 경제적 효율성을 감안하지 않은 중소기업 보호는 장기간 우리 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현재 부분적으로 추진 중인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강도와 폭을 더욱 확대하여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
- 이와 동시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구조조정을 통해 유출된 생산자원이 이들 기업으로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 기술혁신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전략적 지원 및 대기업과의 상생관계 구축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기조는 애초 균형발전 및 기업 간 격차 해소 등을 지향했으나 1990년대 이후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로 전환됨(<표 24> 참조).²⁷⁾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잡힌 발전을 목적으로 1966년 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출발함.
- 1970년대 들어 중화학 공업 육성이 제도적으로 추진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육성과 기업 간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진흥법(1978년)이 제정되었으며, 신용보증기금(1976년)과 중소기업진흥공단(1978년)의 설립,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추진(1979년)이 이루어짐.

27) 중소기업중앙회(2008) 참조

<표 24>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 정책의 변천과정

시기	도입제도	제조업 중소기업 범위(종사자 수, 자산총액)	정책방향	비고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 제정	200인, 5천만 원	택일주의	
1976년	신용보증기금 설립	300인, 5억 원		기본법 1차 개정
1978년	중소기업진흥법 제정 중소기업진흥공단 설립		시책별로 따로 결정	기본법 2차 개정
1979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도입	
1982년		300인	시행령에서 업종별로 중소기업 범위를 따로 정함. 특례업종 도입으로 중소기업 범위 확대	기본법 3차 개정
1983년		500인, 40~80억 원	병행주의로 전환	기본법 시행령
1986년		700인, 80~120억 원		시행령 개정
1987년		1,000인, 80~300억 원		시행령 개정
1992년		1,000인, 120~600억 원		시행령 개정
1994년			고유업종 해제 예시	
1995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1,000인, 200~800억 원	시행령에서 업종별로 정함, 소기업범위 상향조정, 단체수의계약 품목축소, 중소기업 고도화지향	기본법 4차 개정 및 시행령 개정
1996년	중소기업청 발족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기술혁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	
2000년		300인, 80억 원(자본금)	택일주의 전환	시행령 개정
2004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수립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가 결정, 혁신형중소기업 육성목표 수립 혁신형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R&D지원 강화, 기술신용보증기금의조직혁신, 정부 투자확대,고급인력공급지원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2006년, 단체수의계약제도는 2007년 각각 폐지됨	
2006년			고유업종제도 폐지	
2007년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자료: 정연승 외(2008)와 송원근(2008)에서 발췌 인용함.

- 이러한 중소기업의 보호를 통한 육성 정책은 1980년대 이후 더욱 본격화되어 중소기업진흥 장기계획이 추진되면서 중소기업의 범위도 더욱 확대됨.
- 1990년대 들어 보호 위주의 중소기업 정책기조에 변화가 생기면서 고유업종 해제 예시(1994년), 단체수의계약 품목 축소 및 중소기업 고도화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1995년), 중소기업청 발족(1996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1997년) 등이 이루어짐.
- 2000년대 이후 중소기업 정책의 무게 중심이 보호에서 혁신역량 강화로 옮겨가면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2004년), 고유업종 제도의 폐지(2006년), 단체수의계약 제도 폐지(2007년) 등이 이루어졌고, 경쟁 및 투자활성화를 통한 혁신 중소기업 육성이 중점적으로 추진됨.

- 이러한 중소기업 정책기조의 변화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선택과 집중을 어렵게 하는 현행 백화점식 지원방식은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중소기업의 혁신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 현재 각계의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총 1,400여 가지에 이르고 있음.²⁸⁾
- 그러나 현행 지원시책은 기술, 인력, 자금 등 기능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기 곤란하며, 연속적인 지원이 어려운 단점을 지니고 있음.²⁹⁾
- 더불어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 정책이 과도한 양적팽창으로 인해 정책자금의 과다 지원, 지나치게 다기화된 세부 시책, 일부 정책의 성과 부족 등의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³⁰⁾

28) 전경련(2008)에 의하면, 정부는 정책자금, 기술지원, 인력지원, 판로지원, 수출지원, 세제지원 등 11개 부문에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29) 조덕희(2006)

30) 조덕희(2008)

- 특히 참여정부하에서 수립된 다양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들은 대부분 단기적인 사업목표의 설정, 공급자 관점의 자원투입 중심의 정책 기획과 집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³¹⁾
-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산업별 내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이 필요함.

- 정부의 R&D 보조금으로 인한 경제적 성과가 산업별로 다르다는 전성희 외(2006)의 연구결과는 정부의 차별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줌.
- 이와 관련하여 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별이나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지원 아래 여러 개의 소기업이 공동출자한 소기업 대상 연구소를 만들어 이를 통해 산학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음.
- 또한 영세 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대기업이나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주로 혜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술혁신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³²⁾

-더불어 국제 분업화가 세계적 추세가 되어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최근 국제 금융위기 이후 신흥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비중이 더욱 커지면서 더 이상 가격 위주의 국제경쟁력 유지는 불가능할 것임.
- 더불어 가격경쟁력 중시 기조는 제조업의 수직적 분업체계의 심화를 통해 과도한 소기업 편중 현상이라는 부작용을 빚을 수 있음.
- 따라서 현재의 가격경쟁력 중심의 분업구조에서 속히 탈피하여 기술

31) 이병현·장지호(2008)

32) 홍순영(2005)

중심의 분업구조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기술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도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이에 대한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음.³³⁾
- 또한 정책당국은 대·중소기업 간 관계 개선을 위해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합리화에 나설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지나친 고용보호의 해소 및 노동유연성 제고를 통해 과도한 임금 증가세를 억제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 전가되는 비용절감 압력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더욱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분업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이규복(2008)은 외환위기 이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수익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면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의 정당한 평가를 위해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기관의 육성 필요성을 주창한 바 있음.
- 기업의 생산규모가 클수록 기술개발에 수반되는 비용이나 위험의 분산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의 투자 및 생산 활동에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술혁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금융권은 우량 중소기업에 특화된 자본조달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행 금융권의 중소기업 지원은 재무구조가 튼튼한 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33) 이와 관련하여 이장우·강용운(2006)은 대·중소기업 간 기술 및 자금협력과 중소기업 CEO의 기술혁신 의지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 <표 25>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의 조달 원천을 기업규모별로 보여주고 있는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본조달이 원활함을 알 수 있음.
- 이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반드시 높은 성장 가능성으로 연결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창업 초기의 기업이 혁신 능력은 뛰어나지만 창업에 따른 고정비용 등으로 재무구조가 열악할 가능성도 있음.

<표 25> 중소기업 설비투자 총액 및 조달 원천(1998~2007년 평균)

(단위: %)

구 분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199인	200~299인
자기자금	77.8	76.7	73.77	72.4	72.18	71.69
금융기관 차입금	14.64	16.16	18.24	19.22	19.75	21.37
정부정책자금	4.75	5.42	6.23	6.66	6.41	4.81
기타	2.81	1.72	1.76	1.72	1.66	2.13

주: 기타는 주식, 회사채, 외화자금 등 포함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 금융권은 중소기업에 특화된 자본조달 창구를 마련하여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담보부족이나 신용대출 곤란, 신용보증 획득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자금 조달 시 대부분이 내부자금을 활용하고 있음.³⁴⁾
 - 우량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특화된 금융 전문 인력의 양성을 통해 중소기업 투자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

34) 홍순영(2005)

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중소기업 자본조달에 따르는 위험의 효율적인 분산을 위해 금융기법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선진화된 중소기업 위주의 자본조달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대내외 시장규모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시장의 대내외적 확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익성 증진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

-~국제화를 통한 해외시장의 확대는 경쟁 및 선진기술의 도입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촉진할 수 있음.

- 그간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핵심 전략산업 중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구해 왔음.
-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세계화의 물결과 함께 이러한 성장전략이 한계점을 보이면서 중소기업 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기에 이룸.
- 우리 경제의 생명선이 여전히 국제경쟁력 향상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임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제고시켜 줄 방안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복잡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관련 제도를 전략적으로 단순화하여 정책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선택적 지원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수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의 국제화는 수출이나 해외투자와 같은 외향형 활동 이외에도 수입이나 외국인투자의 유도와 같은 내향형 활동과 전략적 제휴나 협력을 통한 공동생산과 같은 두 유형이 혼재된 형태로도 가능함.
- 이와 관련하여 2006년 중소기업특별위원회·중소기업연구원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과반수가 이러한 형태의 국제화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었고, 특히 품질과 기술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되었음.

다고 응답함.³⁵⁾

- 따라서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이 현행 수출 중심 기조에서 벗어나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을 통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의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내수시장의 확대를 위해 민간소비의 활성화가 필요함.

- 민간소비의 부진으로 인한 내수시장의 위축은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성장잠재력 제고에 필요한 투자 부진과 소기업 편중 현상을 가속화함.
- 따라서 민간소비의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 인하를 포함한 다각적인 측면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관련 규제제도의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현행 중소기업 관련 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고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대폭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 관련 규제도 더욱 복잡하게 변하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 중소기업 졸업 시 정부의 지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규모 측면에서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 중소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관련 규제들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함.

- 다수의 중소기업은 규제 준수에 수반되는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1,12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

35) 이준호(2007)

업의 79.9%가 규제가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규제로 인해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경영분야는 설비투자(48.1%), 사업장 이전 및 확장(43.5%)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³⁶⁾

- 중소기업의 규제 대응능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과도한 기업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중소기업 관련 지원은 법으로 정한 범주에 해당되는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 시 정책자금 지원 및 정부조달 등 18개 부처 약 1,000여 개의 지원시책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³⁷⁾
- 과도하게 경직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운용은 중소기업의 인위적 기업 규모 조정을 초래하고 있음.
- 2007년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혜택의 유지를 위해 자회사 설립(17.2%), 아웃소싱 확대(15.3%), 임시근로자 채용확대(13.6%) 등의 편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³⁸⁾
- 또한 중소기업졸업유예제도 적용 기업 중 58.9%가 중소기업으로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³⁹⁾
- 중소기업지원제도의 경직적 운용은 중견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하위규모 기업들의 성장 동기를 약화시켜 현재의 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착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소기업 범위 확대 및 관련 지원제도의 개선을 통해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음.

36) 조병선(2008)

37) 대한상공회의소(2006)

38) 대한상공회의소(2009), 「중견기업 지원의 필요성과 정책과제」, 정책건의자료

39) ibid.

참고문헌

- 김동석, 「제조업의 사업체 규모별 생산성 격차에 관한 실태분석」,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김주훈 편)』, 한국개발연구원, 2005, pp.175-209.
- 김주훈, 「기업 간 분업의 효율성 증진과 중견기업의 역할」, 『KDI 정책연구』, 제18권 제2호, KDI, 1996, pp.63-116.
- 김주훈·김동석·이시욱, 「위기극복 이후의 중소기업 구조조정: 외환위기 경험을 중심으로」, 『KDI 정책포럼』 제216호, 2009.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의 대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2006.
, 「중견기업 지원의 필요성과 정책과제」, 정책건의자료, 2009.
- 산업연구원, 「금융발전이 기업의 금융제약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e-KIET 산업경제정보』 제43호, 산업연구원, 2009.
- 송원근, 「지속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정책의 개선 방향」, 한국경제연구원, 2009.
- 송준기, 「한국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기업성과 결정요인 비교분석 -규모의 경제와 유연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제26권 제4호, 2004, pp.79-98.
- 송치웅, 「부품소재 중핵기업의 기술혁신 결정요인 분석 -기업규모와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제10권 제3호, 2007, pp.431-457.
- 신태영, 「제조업 기업의 기술혁신행태와 결정요인: 기업규모와 기술혁신」, 『기술혁신학회지』 제2권 제2호, 1999, pp.169-186.
- 이규복,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방안」, 『주간 금융브리프』 제17권 4호, 금융연구원, 2008.
- 이병기, 「글로벌 경쟁체제와 중소기업 정책의 새로운 방향」, 한국경제연구원, 2004.
- 이병현·장지호,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고찰: 기술혁신 관점」,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6권 제1호, 2008, pp.107-138.

- 이장우·강용운,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중소기업연구』~제28권 제3호, 2006.
- 이준호, 「글로벌 경쟁시대의 중소기업 국제화」, 중소기업연구원, 2007.
- 장석인, 「제조업의 양극화 실태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양극화 문제 해소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
-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중소기업 지원제도 요람」, 전국경제인연합회, 2008.
- 정기호·김광희, 「최소효율규모(MES)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형 업종식별-광공업 세세분류별(5 digit) 연구」, 『중소기업연구』~제23권 제4호, 2001, pp.131-153.
- 전성희·이일규·이시영,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과 경제성과」, 『중소기업연구』~제28권 제3호, 2006, pp.217-241.
- 정연승 외, 「중소기업 적정 범위와 일자리 창출」, 한국경제연구원 발표자료, 2008.
- 조덕희, 「중소기업의 성장구조 및 혁신역량 분석」, 산업연구원, 2005.
- _____, 「중소기업정책의 당면 문제점과 성과 제고 방안」, 『e-KIET 산업경제정보』~제400호(2008-26), 2008.
- _____(2006a), 「중소기업 경영성과 장기부진의 원인과 대책」,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2006.
- _____(2006b), 「중소 제조기업의 영세화 현황과 대응」, 『e-KIET 산업경제정보』~제320호, 산업연구원, 2006.
- 조병선, 「중소기업 규제 실태와 개선방안」, 기은경제연구소, 제13회 희망 중소기업 포럼 “기업 규제완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발표자료, 2008.
- 중소기업중앙회, 「中소육성시책의 발전과정으로 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제발전 공헌비교-제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중앙회, 2008.
- 홍순영,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방안」, 서울경제 기고, 2005.
- 홍지승,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유형화와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8.

- Acs, Z. J., Morck, R. and Yeung, B., "Productivity Growth and Firm Size Distribution," in Z. J. Acs, B. Carlsson and C. Karlsson (eds.), *Entrepreneurship,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he Macro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9.
- Allen, F., Qian, J., and Qian, M., "Law, finance and economic growth in China,"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7(1), 2005, pp.57-116.
- Bardhan, "Corruption and development: a review of issu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5, 1997, pp.1320-1346.
- Barro,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a Cross-Country Empirical Study*, MIT Press, Cambridge and London, 1997.
- Beck, T., A. Demirguc-Kunt, and R. Levine, "Law and firms' access to finance," *American Law and Economic Review* 7, 2005, pp.211-252.
- Beck, T., A. Demirguc-Kunt, and V. Maksimovic, "Financial and Legal Institutions and Firm Size,"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2997, The World Bank, 2003.
- Brown, Charles, James Medoff, and Jay Hamilton, *Employers: Large and Small*,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 Butkiewicz and Yanikkaya, "Institutional quality and economic growth: Maintenance of the rule of law or democratic institutions, or both?," *Economic Modelling* 23, 2006, pp.648-661.
- Caves, Richard E., Michael E. Porter, and Michael A. Spence, *Competition in the Open Economy: A Model Applied to Canad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 De Gregorio, J. and P. E. Guidotti,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World Development* 23(3), 1995, pp.433-448.
- Gwartney, J., R. Lawson, and S. Norton,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08 Annual report," *Economic Freedom Network*, 2008.
- Knack and Keefer,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cross-country tests

- using alternative institutional measures,” *Economics and Politics* 7, 1995, pp.207-227.
- Kumar, Rajan and Zingales, “What determines firm size?,” NBER Working Paper 7208,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99.
- Levine, R., “Finance and growth: Theory and evidence,” P. Aghion and S. N. Durlauf (eds.), *Handbook of Economic Growth*, Volume 1A, Handbooks in Economics Series, 2005.
- Love, I., “Financial development and financing constraints: International evidence from the structural investment model,” *Review of Financial Studies* 16, 2003, pp.765-791.
- Lucas, “On the size and distribution of business firms,” *Bell Journal of Economics* 9(2), 1978, pp.508-523.
- Marta Kozak,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 Collection of Published Data,”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Washington, D.C., 2005.
- Mata, “Markets, Entrepreneurs, and the Size of New Firms,” *Economic Letters* 52:1, 1996, pp.89-94.
- OECD(2005a), Statistics on Enterprises by Size Class (SEC) database, 2005.
- OECD(2005b), SME and Entrepreneurial Outlook, 2005.
- Pagano and Schivardi, “Firm Size Distribution and Growth,”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105(2), 2003, pp.255-274.
- Rajan, R. G. and L. Zingales, “Financial Dependence and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88, 1998, pp.559-586.
- Rosenzweig, Mark R., “Labor Markets in Low-Income Countries,” In *Handbook of Development Economics* Vol.1, Amsterdam: North-Holland, 1998.
- Sala-i-Martin, “I just ran two million regress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87, 1997, pp.178-183.
- Shaffer, S., “Firm size and economic growth,” *Economics Letters* 76, 2002, pp.195-203.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09*, The World Bank, 2009.

Thorsten Beck, Asli Demirgüç-Kunt and Ross Levine, “A New Database on Financial Development and Structure,” *World Bank Economic Review* 14, 2000, pp.597-605.